



# 청년 일자리 재정정책의 개선방안

## 모색: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2019. 12

김문정 · 이수형



# 청년 일자리 재정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2019. 12

김문정 · 이수형



## 서 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및 재정 정책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 눈에 띄는 정책흐름 중의 하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 정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금지원 정책은 크게 조건부 지원과 무조건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현금지원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구직촉진수당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들이 이러한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속하거나 구직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한 연령 및 거주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 대상 무조건부 현금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 대상 무조건부 현금지원이 지역상품권으로 보통 이루어지므로 지역상품권 확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먼저 청년 관련 성과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현금 지원 정책의 함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년 관련 성과변수가 가구소득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면, 청년 대상 현금지원으로도 해당 성과변수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의 향후 매출액에 대한 예상이 비가맹점 대비 높게 상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지자체에 도입되거나 확대된 시점에 가맹을 개시한 사업장일수록 향후 매출액 증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예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현금지원이 청년의 여러 성과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역상품권의 지역경제 효과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가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청년 정책으로 확대된 지역상품권이 사업장 매출에 미치는 효과도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어 해당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문정 부연구위원과 서강대의 이수형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원내 원종학 선임연구위원과 김우현 부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 두 분은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해 주셨다.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및 지역상품권 정책담당자들은 연구자들이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 집행 상의 쟁점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도 및 문헌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준 임현정 선임연구원을 포함하여, 기본과제와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한 연구사업팀, 그리고 교정·출판을 담당한 지식정보팀 직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이 책임을 지고 작성한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발견될지도 모르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본 보고서는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다.

2019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연구의 개요

### 가. 문제의식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유례 없이 낮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러하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학력자 집단에서 청년실업자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노동 공급 측면을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실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가 낮은 출산율, 지역 소멸 등의 사회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차원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대상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의 청년 대상 지원정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로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예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정부가 현금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사후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대상 현금지원도 적지 않다. 특이점은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지원은 일정한 자격 요건만 달성되면 무조건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의 경우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6세 모든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된다.

이렇듯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양상인 만큼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정책적 쟁점사항이 적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개인, 청년들의 가족,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식은 무엇인가?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청년에게 현물이나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한 현금지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어 정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및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무조건부 현금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기한 질문의 일부에 대하여 답을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역시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것은 아니기에 위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들에 모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답한다 해도 반드시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입안 및 결정자들이 새로운 청년 정책을 설계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나. 연구 대상과 연구방법

여러 현금지원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기에 앞서 개별 정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역상품권으로 제공되는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에 주목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청년의 후생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다. 둘째, 청년 대상 현금지원을 통해 지급된 지역상품권이 가맹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대상 현금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한다.

각 연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하여 간접적인 증거만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구소득과 청년 대상 성과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현금지원 정책의 함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만약 가구소득수준과 청년 관련 성과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이 청년 관련 성과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의 경우, 특정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가맹점과 비가맹점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답을 구하고자 했다. 특히,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지자체에 도입되거나 확대된 시점에 가맹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대상 현금지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고안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의 청년정책 및 지역상품권 담당자들을 인터뷰하였다.

## 2. 주요 연구결과

### 가. 가구소득과 청년의 성과변수 간의 관계

청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족배경 변수가 청년의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OLS, Probit, Ordered Probit, Quantile Regression, Heckman 2SLS, Cox PH Model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가족배경 변수로는 부모의 교육수준, 22세 기준 가구소득, 부모의 종사상 지위 등을 고려하였고, 청년성과 변수로는 27세 기준 (고임금) 일자리 취득 여부, 27세 기준 일자리 취득 여부, 고등학교 졸업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고임금) 일자리까지의 소요기간, 시간당임금, 월임금,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등을 고려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고임금) 일자리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을 성과변수로 설정한 생존분석(Duration Analysis) 결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량분석 결과에서 가구소득이 청년의 성과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생존분석 결과 역시, 고졸시점의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에 의한 내생성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할 때, 본고에서 저자들은 결국 가구소득이 청년의 성과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단, 부모의 교육수준이 이러한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향후 매출액 예상에 대한 지역상품권 가맹점 효과

다음으로 청년 대상 현금지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는 특정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으로 인한 지역상품권의 확대가 지역상품권 사업체의 향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비가맹점에 비해 향후 매출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맹점 효과는 각 사업체의 특질을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으로 지역상품권의 발행이 크게 증가한 시점에 가맹점 등록을 한 사업체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향후 매출액에 대하여 긍정적인 예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정책적 시사점

#### 가. 청년의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첫 번째 연구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과는 ‘청년의 교육수준과 ‘비화폐적 가족배경 요인’을 가구소득과 같이 통제할 때, 많은 경우에 전자의 두 가지 항목만 청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취업 여부나 임금 수준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없지만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지역사회 소속감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효과분석이 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수혜 여부를 직접 평가하지 못한 만큼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지역상품권으로 제공되는 청년 대상 현금지원의 확대로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해당 정책의 효과를 아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파악한 내용을 신뢰할 만하다는 가정하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가구소득이 청년들이 일정한 교육수준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으나 노동시장 진입 전후의 과정에서는 그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간 상호 연관성이 높는데 청년들의 교육수준만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이 청년의 교육 성과에 대부분 포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구소득과 비화폐적 가족배경 변수가 동시에 통제변수로 포함되었을 때 비화폐적 가족배경 변수만이 청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비금전적인 요인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가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가진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녀가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청년의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비금전적 요인이 금전적 요인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단순히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

다. 정부서비스로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도움을 주는 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구직지원 및 멘토링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 나. 지역상품권과 결합한 청년지원의 사업체 효과

앞서 특정 지자체 사례에 국한하여 본원 자체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맹점의 경우 비가맹점에 비하여 향후 매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초통계량이나 회귀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청년지원 정책의 확대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상품권 가맹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향후 매출에 대한 가맹점의 기대가 비가맹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것에 비해, 향후 노동사용량에 대한 기대 수준은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지역상품권 대상의 사업체가 영세사업체인 만큼, 청년지원 정책을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내 고용규모를 확대하는 효과까지 낳기는 어려울 것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영세사업체에서 창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상품권 활성화가 청년고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다.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을 때,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방정부의 역할

- (증거 기반 정책 추구)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가 소유한 행정자료와 기존의 국가통계 조사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에 적지 않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의 성과를 정책수혜자의 만족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해당 정책의 개인 및 지역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러한 분석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 (고용서비스 및 멘토링 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 양질의 고용서비스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본고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면 해당 지자체 단체장은 기존 현금지원에 소요된 재정을 일부 고용 및 멘토링 서비스 정책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지역상품권 운영방식의 투명화) 지역상품권으로 복지정책을 운영하는 유형은 지류, 모바일, 카드형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때 카드형으로 지급하는 경우, 민간 카드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지역 내 영세사업체를 지원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카드형으로 지급되는 경우 미집행 금액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지류나 모바일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보통 지자체가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확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가맹사업체를 꾸준히 관리하는 데 일정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와 달리 인쇄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휴대폰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류나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의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할인율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준의 할인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개인이 해당 할인율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한 달 구매량의 한도를 정하거나 구매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할인된 지역상품권의 유통으로 특정 사업체만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지역상품권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 지역상품권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가맹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영세 사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특정 사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업종에 종사하는 임의의 사업체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중요하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지역상품권을 지자체 주민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재량적인 소비결정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중앙정부의 역할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혜 관련 통합전산망 구축) 중앙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수당 및 다른 청년정책의 수혜정보를 수혜자들과 실무 담당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복 여부를 승인하거나 허용하기 전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정부의 현금지원에 대한 자체점검 가이드라인 논의)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으로 현금성 청년정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성공적인 지자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중복수혜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지원과 지자체의 현금지원에 대해 중복수혜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만약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면 지자체의 현금지원정책의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의 기준과 조건 마련) 지자체의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복지정책의 부적효과(stigma effect)를 없앤다는 점과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무조건 현금지원은 정책효과가 사실상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고소득 계층에도 현금지원이 제공된다는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중앙정부가 청년 대상 현금지원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재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같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자체의 청년들에게 가능한 한 중앙정부의 서비스가 간접적으로라도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지역상품권 관련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류보다 모바일 상품권이 유통비용이 적고, 접근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만약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상품권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단,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플랫폼 개발비용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폐공사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가맹사업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역시 중앙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당 시스템을 지자체에 무료 배포하는 것도 고려해볼 직하다.



## 목 차

I. 서론	21
II. 청년 대상 고용노동 정책 현황	24
1. 기존 정부의 청년정책 개관	24
2. 최근의 청년정책 개관	27
3. 소결	31
III. 청년 대상 현금지원의 효과 메커니즘: 기존 문헌 검토	33
1. 국내사례	33
2. 정책사례	35
3. 실태분석	36
4. 정책효과 분석	37
5. 소결	38
IV. 경제적 여건이 청년 구직활동 및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40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40
2. 자료소개 및 기초통계량	46
3. 분석결과	51
4. 소결	86
V. 지역상품권 형태의 청년수당의 사업체 효과	89
1.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소개	89
2.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 - 사업체를 중심으로	94

---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25
1. 내용 요약 .....	125
2. 정책적 시사점 .....	129
참고문헌 .....	135
부 록 .....	141
1. 기존 문헌조사 .....	141
2.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	153

---

---

## 표목차

〈표 II-1〉 정권별 청년정책 개관 .....	25
〈표 II-2〉 중앙정부 청년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2018~2019년) .....	29
〈표 II-3〉 지자체별 청년지원 정책(2019년) .....	30
〈표 IV-1〉 분석 대상의 출생연도 .....	47
〈표 IV-2〉 청년패널 분석표본 기초통계량(1) .....	48
〈표 IV-3〉 청년패널조사 - 기초통계량 .....	49
〈표 IV-4〉 경제적 여건과 청년의 27세 기준 취업 여부(OLS) .....	51
〈표 IV-5〉 경제적 여건과 청년의 27세 기준 2,500만원 이상 일자리 취업 여부 (OLS) .....	52
〈표 IV-6〉 경제적 여건과 청년의 27세 기준 취업 여부(Probit) .....	53
〈표 IV-7〉 경제적 여건과 청년의 27세 기준 2,500만원 이상 일자리 취업 여부 (Probit) .....	54
〈표 IV-8〉 고등학교 졸업부터 취업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coefficients) ..	55
〈표 IV-9〉 고등학교 졸업부터 고임금 일자리 취업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coefficients) .....	55
〈표 IV-10〉 청년의 시간당임금(log(wage))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OLS) .....	58
〈표 IV-11〉 청년의 시간당임금(log(wage))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Heckman 2SLS) .....	59
〈표 IV-12〉 청년 임금(log(earning))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OLS) .....	61
〈표 IV-13〉 청년 임금(log(earning))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Heckman 2SLS) ..	62
〈표 IV-14〉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1 .....	65
〈표 IV-15〉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2 .....	66
〈표 IV-16〉 건강상태에 대한 결정요인(Probit/marginal effects) .....	72

---

〈표 IV-17〉 건강상태에 대한 결정요인(Ordered Probit) .....	73
〈표 IV-18〉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Probit/marginal effects) .....	77
〈표 IV-19〉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Ordred Probit) .....	78
〈표 IV-20〉 경제적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Probit) .....	81
〈표 IV-21〉 경제적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2(Probit/marginal effects) .....	82
〈표 IV-22〉 경제적 지원금액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OLS) .....	85
〈표 V-1〉 성남시의 정책수당 지급방법(2019년 10월 기준) .....	90
〈표 V-2〉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관련 법적 근거 및 시행 연혁 .....	93
〈표 V-3〉 설문조사 문항 개관 .....	95
〈표 V-4〉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기초통계량 비교 .....	97
〈표 V-5〉 (가맹점 대상) 성남사랑상품권 인지경로 및 가맹시점 .....	99
〈표 V-6〉 (가맹점 대상) 가맹점 가입 계기 및 향후 가맹유지 계획 .....	100
〈표 V-7〉 (가맹점 대상) 2016년 청년배당 정책 도입 이후 매출 및 노동투입량의 변화 .....	101
〈표 V-8〉 (가맹점 대상)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 전망과 지역상품권 정책 영향 여부 .....	103
〈표 V-9〉 (가맹점 대상)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노동력 투입 전망과 지역상품권 정책 영향 여부 .....	104
〈표 V-10〉 (비가맹사업장) 성남사랑상품권 인지도 및 인지경로 .....	105
〈표 V-11〉 (비가맹점 대상)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 전망과 지역상품권 정책 영향 여부 .....	107
〈표 V-12〉 (비가맹점 대상)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노동력 투입 전망과 지역상품권 정책 영향 여부 .....	108
〈표 V-13〉 향후 긍정적인 매출 예상과 가맹점 여부와의 관계 - Probit (시군구 레벨 클러스터) .....	116

---

〈표 V-14〉 향후 긍정적인 노동투입 예상과 가맹점 여부와의 관계 - Probit (시군구 레벨 클러스터) .....	117
〈표 V-15〉 향후 긍정적인 매출 예상과 가맹점 여부 및 정책 영향 의견과의 관계 - Probit(시군구 레벨 클러스터) .....	122
〈표 V-16〉 향후 긍정적인 매출 예상과 가맹시점과의 관계 - Probit(시군구 레벨 클러스터), 비가맹점 포함, 업력 무관 .....	123
〈표 V-17〉 향후 긍정적인 매출 예상과 가맹시점과의 관계 - Probit(시군구 레벨 클러스터), 2015년 이전 개소 사업장만 .....	124

## 그림목차

[그림 IV-1] 분위회귀분석: 추정치와 신뢰구간 .....	67
-----------------------------------	----

## 부록 표목차

〈부표 1〉 청년 관련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정리 .....	141
〈부표 2〉 청년 관련 최근의 해외문헌 정리 .....	150

---



---

## I. 서론

---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유례 없이 낮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학력자 집단에서 청년실업자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노동 공급 측면을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실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가 낮은 출산율, 지역 소멸 등의 사회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차원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대상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의 청년 대상 지원정책의 주요 특징은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정부가 현금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사후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대상 현금지원도 적지 않다. 특이점은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지원은 자격 요건만 달성되면 무조건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의 경우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6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된다.

이렇듯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양상인 만큼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정책적 쟁점사항이 적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개인, 청년들의 가족,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가?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어

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식은 무엇인가?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청년에게 현물이나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한 현금지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어 정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및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무조건부 현금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기한 질문의 일부에 대하여 답을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청년의 후생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다. 둘째, 청년 대상 현금지원을 통해 지급된 지역상품권이 가맹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대상 현금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한다.

각 연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하여 본 고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만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구소득과 청년 대상 성과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현금지원 정책의 함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만약 가구소득의 정도가 청년 관련 성과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이 청년 관련 성과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의 경우, 특정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가맹점과 비가맹점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답을 구하고자 했다. 특히,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지자체에 도입되거나 확대된 시점에 가맹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여부를

예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대상 현금지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고안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담당자들을 인터뷰하였다.

---

## Ⅱ. 청년 대상 고용노동 정책 현황

---

### 1. 기존 정부의 청년정책 개관

〈표 II-1〉에서는 정권별 청년정책을 개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한 개 혹은 두 개의 새로운 청년고용 대책을 거의 매년 제시했을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주요 경제쟁점으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정책의 내용은 사실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해외 취업을 통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노무현 정부(해외 취업 촉진대책), 이명박 정부(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박근혜 정부(청년 해외 취업 촉진방안)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3월 15일 청년 일자리대책 종합자료에서도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해외 지역 전문가 양성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8. 3. 15).

청년-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도 대부분의 정부의 청년대책에서 발견된다. 이명박 정부의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노무현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대책(2005년 1월)<sup>1)</sup>이나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2006년 4월)<sup>2)</sup>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중소기업에 청년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내일 채용공제를 도입하였고,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

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대책-학교,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2005. 1.

2) 고용노동부,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제7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확정안), 2006. 6. 13.

〈표 II-1〉 정권별 청년정책 개관

연월	정책명	범위	
노무현 정부	2003년 9월	청년실업 종합대책	종합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	
	2005년 1월	청년고용 촉진대책	종합
	2006년 3월	해외취업 촉진대책	부문
	2006년 4월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	부문
	2007년 4월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종합
이명박 정부	2008년 4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부문
	2008년 8월	청년고용 촉진대책	종합
	2009년 3월	청년고용 추가대책	종합
	2009년 10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	
	2009년 12월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부문
	2010년 10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종합
박근혜 정부	2011년 5월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종합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부문
	2013년 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종합
	2014년 4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종합
	2014년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방안	부문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	종합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015년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부문
	2016년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부문
문재인 정부	2017년 3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종합
	2017년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종합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

자료: 한요섭(2017), p.95 〈표 6-1〉을 기반으로 하되 다음 최신 정책을 보완하여 작성함  
고용노동부(2005. 1.; 2015. 12.; 2018. 12.); 관계부처 합동(2017. 3. 22; 2018. 3. 15; 2017. 12.);  
국가법령센터, <http://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19. 9. 30.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공공일자리 81만개’인 것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제시되었다.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에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청년층 증원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개선이나, 고용 정보 제공, 청년창업 육성 정책 등도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되어 왔다.<sup>3)</sup>

물론, 정권마다 특징적인 사항도 존재한다. 한 예로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국가고용지원 서비스의 혁신방안이 제시되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 △공무원을 고용지원센터 실무 인력으로 배치, △직업상담원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환 등을 시도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김영재·정상완, 2013).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분권형 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시도한 것도 이 시기이다.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도 많이 제시되었다. 2004년 6월 노무현 정부하에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목적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제4조),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분야의 채용 확대 등(제6조),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제7조),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3장),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공표 등 정부의 행정지원체계(제4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 소속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폐지된다(2008년 2월 29일).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은 애초에 2008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된다.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법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대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법 제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동일 시점에서 노동부 산하

3) 청년창업사관학교, [https://start.kosmes.or.kr/yh\\_ysi020\\_001.do](https://start.kosmes.or.kr/yh_ysi020_001.do), 검색일자: 2019. 6. 13.

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청년고용 촉진의 주요 추진 체계를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립하게 된다. 이는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소속이었던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와 대비된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애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가 권고사항을 머무는 것을 넘어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이러한 청년고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원래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지만 2017년 1월 1일 이러한 법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2월 31일에는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의무제도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자체의 유효기간이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되었다.

## 2. 최근의 청년정책 개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2018년 19조, 2019년 23조로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2018년 3월 15일 범부처 청년일자리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8. 12). 한편,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었다. 본 절에서는 최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청년정책은 대부분 2018년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가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1명 더 신규채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 제도는 청년을 2명 고용하면 3명째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2명 고용’이라는 기존의 조건을 제거하고 신규채용 1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제공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는 원래 중소기업부 정책으로 존재했던, 재직자 중심의 내일채움공제제도를 신규 청년취업자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청년의 매칭의 지속성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한 청년이 2년 혹은 3년 장기 근속한 경우 일정한 자산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경우,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하면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후 2017년 추경으로 목표자산액은 1,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2018년 5월 추경 이후에는 기존 2년형과 더불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운영되고 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단, 청년인턴제의 경우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장보다 청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인턴제는 2017년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또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 안에 포함된 바 있다.<sup>4)</sup>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2017년 추경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안에 도입이 되었다.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안에서의 수당제도가 아니라 단독 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직접일자리 사업도 존재하는데 보통 청년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은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 그동안 대부분의 사업이 특정 연령대에 대한 타겟 비율을 명시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특히 청년층에 대한 목표 비중은 보통 상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내에서 청년 목표 비중을 상정하고 있다. <표 II-2>에서는 청년층 목표 비율이 50% 이상인 직접일자리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4)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자: 2019. 9. 30.

〈표 II-2〉 중앙정부 청년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2018~2019년)

부처		세부사업명	시행 연도	
			2018년	2019년
1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	√	-
2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
3	국토부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	-
4	국토부	항공 전문인력 양성(항공인턴십 지원)	√	-
5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	-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농업법인 취업지원)	-	√
6	농진청	해외 농업기술개발 지원(ODA)	√	√
7	문체부	박물관진흥 지원(등록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	√
8	문체부	예술인력 육성(예술인력 재교육(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	√
9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학교예술 강사 지원, 복지기관 예술 강사 지원)	√	√
10	문체부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
11	문체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	√
12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	-
13	문체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	√
14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
15	산림청	국제산림협력(해외산림인턴 지원)	√	√
16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	-
17	행자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경상)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
18	농림부	농식품수출 시장 다변화(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	√
19	복지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지역 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	√
20	해수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	√
21	행자부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청년인턴십 운영(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
22	행자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지역정책 지원형 민간취업 연계형)	-	√

주: 청년층 참여 목표 비율 5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부예산안」, [lkms.assembly.go.kr/bill/main.do](http://l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일자: 2019. 9. 30. 각 연도에 첨부된 각 부처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지자체별 청년정책

청년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시작으로 청년에 대한 각종 수당 사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 지자체별 청년지원 정책이 <표 II-3>에 소개되어 있다. 주요 특징으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수당을 지급할 때 보통 가구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고, 대신 구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득조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와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둘째, 일반적인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청년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표 II-3> 지자체별 청년지원 정책(2019년)

(단위: 만원 명)

지자체 및 지원정책명	지원형식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사업규모 (명)	신청자격 혹은 선발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sup>1)</sup>	체크카드 (매월(총4회)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월 50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4,000명 내외	만 19~34세 서울시 거주(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 경과자(중위소득 150% 미만)
부산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청년디딤돌카드)	체크카드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월 50	6개월	600	공고일 기준 만 18세~34세 부산시 거주 미취업자 중 졸업·중퇴 후 2년 초과자(중위소득 120% 이하)
인천시 드림체크 카드	체크카드 (매월 구직 활동 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출)	월 50	최대 6개월	250명 내외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인천 거주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 최종학력 기준 졸업 2년 경과자(중위소득 150% 이하)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복지포인트	월 50	6개월	2,500	신청일 기준 만 18세~34세 대전 시에 6개월 이상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교 졸업·자퇴 후 2년 경과한 자 또는 대(학)교·대학원 졸업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위소득 150% 미만)

〈표 II-3〉의 계속

(단위: 만원 명)

지자체 및 지원정책명	지원형식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사업규모 (명)	신청자격 혹은 선발기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지역화폐	분기별 25 (연 100)		17.5만	만 24세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소득조건 無)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복지포인트	연 100		1,360	만 15~39세 신청일 기준 경북 거주,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월 평균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 미만 청년 근로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지역화폐	분기별 25 (연 100)		1만2,986	만 24세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소득조건 無)
전라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체크카드 (매월 구직 활동보고서 제출)	월 50	6개월	376	공고일 기준 만 18세~34세 전라남도 거주, 졸업·종퇴(학력무관) 후 2년 경과(중위소득 150% 미만)

주: 1)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 (1차) 기준

자료: 한요셉(2017), p. 117, 〈표 6-6〉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보완 작성함  
 경기도(2019. 3. 27); 서울특별시(2019. 3. 15a; 2019. 3. 15b); 부산광역시(2019. 3. 13); 인천광역시 (2019. 5. 8); 대전광역시(2019. 3. 15); 경상북도(2019. 4. 1); 성남시(2019. 4. 9); 전라남도(2019. 5. 3)

### 3. 소결

본 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청년정책 및 최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역대 정부(문재인 정부 포함)의 청년정책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상으로 정부 간 중복되는 청년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청년의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는 ‘인턴’제도나 해외취업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정책 시도가 있었다. 또한 가능하면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자 했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도 내용을 포함하는 청년고용법의 제정, 개정, 연장 등을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지만, 청년들은 높은 눈높이로 인

하여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에 주목하였다. 단, 과거에는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지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재에는(적어도 고용노동부 주관 정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어느 경우이든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정부당국이 노동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노동공급 측면에서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좋은/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선호의 인식은 최근 들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일자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을 사실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 실업문제를 ‘인턴’ 경험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시도에서 현재 임시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청년실업률을 단기적으로 낮추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더 인식하고, 중소기업 고용을 가장 꺼리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가 낮은 임금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임금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기업 측의 취약계층이 아니었던 중견기업이 포함된 것은 청년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중소기업-청년이라는 취약계층에 양면적 지원체계의 틀이 다소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최근에는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하려는 시도가 많이 관찰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는데, 이와 관련한 현실적 이유로는 현금지원의 경우 정책만족도가 높고, 정책 설계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집행이 용이한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세는 긍정적이나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중앙-지방 간 대립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의 방향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유사한 정부 정책 간의 중복수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청년 정책에 있어서 중앙-지방 정부 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 Ⅲ. 청년 대상 현금지원의 효과 메커니즘: 기존 문헌 검토

---

본 장에서는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 및 청년 대상 고용노동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 및 학술논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의 초점이 현금 지원정책과 관련된 것인 만큼 청년 대상 고용노동 정책 중에서도 현금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sup>5)</sup>

#### 1. 국내사례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으로 김안나·홍현우(2018)를 고려할 수 있다. 저자들은 2012~2016년 기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니트족(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비율이 증가하고, 청년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 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호 이질적이며, 소득보장 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한다.

보다 구체적인 소득지원 정책으로서 많이 고려되는 정책은 청년구직수당이다. 강신욱 외(2017)는 청년구직수당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빈곤율과 빈곤격차 비율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보다 빈곤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구직수당에 한정적인 연구로서 이병희 외(2018)는 자기주도형 구직청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년촉진수당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제안을 담은 연구로 김문길 외(2015)를 고려할 수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청년 탈빈곤화를 목적으로 한, 현재와 미래의 근로빈곤층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철인(2016)은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장려금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

5) 본문에 서술된 논문이나 보고서를 포함한 더 다양한 내용이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 후 1년가량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자의 분석결과 대략 18일 가량 구직기간이 단축되고 임금수준이 3%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소득 지원의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한 연구로는 이승윤 외(2016)가 있다. 저자들은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청년의 임금보조수당, 청년기본소득 등의 세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소득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2014년 가계동향조사를 19~29세 청년들의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구형태, 주거형태, 소득유무·규모 등이 생활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OECD(2007)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악화된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10년 전의 보고서이지만, 오늘날의 청년 고용상황에 적용되는 실태분석이 적지 않다. 1990년대 후반 청년실업의 원인이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로 인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노동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점, 고용형태별 보호수준 격차가 커서 노동시장의 질을 악화시키고, 청년의 정규직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 구직 중인 비고용청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에 대하여 직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트족(NEET) 청년 대상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 청년구직자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공공고용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꼽았다.

오재호·천영석(2016)의 경우 청년고용정책은 청년취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청년의 노동공급이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창균 외(2017)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의 대상을 크게 ① 취업준비 저소득 가구 출신 청년, ② 고졸 니트족(NEET), ③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준비를 포기하려는 취업준비생, ④ 기혼여성의 네 그룹으로 구분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유형 1의 경우 목표집단에 상관없이 일정한 자산기준을 통과할 경우 지원하고, 기타 집단의 경우는 보다 완화된 형

태의 자산조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p. 67~73).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연구도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승렬 외(2017)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서울시)과 청년배당(성남시)의 성격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남훈(2015)은 성남시 청년배당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아직까지는 정책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분석이나 정성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현금지원에 대한 정량분석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2. 정책사례

OECD and ILO(2014)는 청년실업 및 불안전고용 추세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이 수행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시에 G20 국가에서 수행된 청년고용 정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OECD(2018)에서는 OECD 회원국 사이에서 청년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청년정책과 관련 제도, △정부정책에서의 청년 관점 반영 방안, △청년의 참여와 대표성 제고, △법적 문제와 연령 제한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검토결과, 해당 보고서에서는 ① 많은 국가에서 교육, 고용, 보건 등이 모두 중요한 청년정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② 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청년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 영역에서의 청년의 참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③ 청년들이 의회, 중앙정부 행정부 내에서의 대표성이 낮아지고 있는 등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청년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Mascherini(2016)를 참고할 수 있다. “청년보장이란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받는 상황을 가리킨다. 지속적 교육 제공에는 인정되는 직업자격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다(Mascherini, 2016, p. 10).” 2013년 6월 EU 이사회에서 청년보장 프로그램 수립 권고안이 승인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청년보장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럽 차원의 자금출처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청년보장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6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해당사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조기개입 및 활성화, △노동시장 통합 지원책, △EU 구조기금의 적극적 활용, △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개선, △신속한 이행 등이 상정되었다.

### 3. 실태분석

청년의 고용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미스매치’ 현상을 꼽는 만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희망하는 일자리 간의 간극을 검토하는 조사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OECD(2017b)에서는 개도국 청년들의 경우 희망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간의 격차가 실제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노동시장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반면,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학교-노동시장의 연계과정 역시 청년문제의 주요 초점이다. OECD and ILO(2014)에서는 선진국 8개국과 개도국 8개국을 선정하여 청년들의 청년-노동시장 전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본 결과, ① 선진국은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업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들에게도 실업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② 개도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의 청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실업급여제도가 없거나 실업기간 동안의 지원이 제한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등교육 취득률이 상당히 높고,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취해졌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정책방향과 유사하지만, 오랜 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실업소득 지원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는 ‘개도국’의 정책방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니트족(NEET) 청년문제도 청년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사항 중 하나이다. Carcillo et al.(2015)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청년 니트족의 상황을 검토하고, 청년소득지원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니트족 비율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 비율은 국가 간 상당히 이질적이며, 그 간극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더 심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남아 있는 청년들은 보통 가장 취약한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 가

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적 환기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취약한 청년들도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이나 멘토링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Mascherini(2016)는 유럽 내 청년고용 최근 현황 및 2013년 이후 청년보장정책의 진척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2014년에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많은 유럽 국가에서 청년고용률이 증가하였고 2015~2016년에 더욱 확고하게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단, 그리스, 포르투갈을 비롯한 다수의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청년실업률이 30%를 상회하는 등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높다. 둘째, 청년 장기실업 문제가 심각하여 유럽 장기실업의 1/3이 청년의 장기실업에 의해 유발되고 있다. 단, 청년보장제도가 실행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장기실업률이(총청년 실업자 대비) 10% 이하로 낮은 편이다. 또한, 니트족(NEET) 비중도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20개 EU 회원국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 구성원으로는 재진입자, 단기 실직자, 장기 실직자,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자, 장애로 취업이 불가능한 자, 구직 단념자 등이 있다. 2013년 EU 노동력 조사에 의해서는 단기 실직자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 실직자, 가족 책임으로 인한 니트족, 재진입자 등의 순이다.

#### 4. 정책효과 분석

청년 대상 정책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OECD(2017a)에서는 청년 대상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관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로서 OECD(2016)에서는 청년(16~29세)과 비청년(30~64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소득지원(실업급여, 가족수당, 공공부조, 장애급여 등)을 받기 전 대비 빈곤층 탈피 비율을 분석한 결과, 청년집단의 경우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청년고용지원 사업의 실증분석으로는 European Commission(2016; 2018)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uropean Commission(2016)에서는 사업 대상 니트족의 29% 대상으로 교육, 훈련,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프랑스 청년고용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말까지 목표의 두 배 이상 달성한 것을 고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탈퇴한 참여자의 52%가 고용, 훈련, 교육으로 탈퇴한 긍정적인 경우였다. 참여자의 31%는 6개월 이상 고정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었고, 7%는 인턴십, 창업계약, 6개월 이하 고정계약직 등의 다른 형태로 고용되었으며, 14%는 교육이나 훈련으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EC(2018)에서는 저숙련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고용노동정책의 경우 관련된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등 프랑스 청년보장 사업의 한계점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 청년보장 사업에 대한 평가로 심창학(2017)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청년보장제도에 대해서는 La Spina and Barbetti(2014)를 참고할 수 있다.

Escudero and Mourelo(2017)에서는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였는데, 저자들은 많은 유럽 국가에서 분명한 자격요건(eligibility criteria), 효과적인 제도설계(institutional frameworks), 광범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상당수가 조기관여(early intervention) 및 효과적인 집행 메카니즘 측면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오선정(2018)은 유럽 청년보장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 바 있다. 경제호황과 같은 거시경제적 영향을 배제하여 청년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경우, 청년실업률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주를 이루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는 제한된 예산과 청년 니트족의 낮은 참여율 때문으로 진단한다.

## 5. 소결

최근 청년정책과 관련된 국외 문헌은 대부분 유럽의 청년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사회보장 정책 집행 후 2014~2016년 기간 청년실업률이나 니트족 비중이 줄어들었고, 집행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년고용 문제를 청년사회보장 정책이 실질적으로 완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거시경제적 효과를 통제할 경우

청년사회보장 정책의 실질적인 실업률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가 적지 않은 것이다. 다소 최근에 집행된 정책인 만큼, 이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단, 청년정책을 수행할 때, 정책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파악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경우도 한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정부의 구직촉진수당, 지자체의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정책이 도입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금정책 외에도 청년고용 시 고용보너스와 같은 고용장려금을 제시하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최근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년현금수당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추가로 연구할 분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많은 경우 청년고용 유인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 유인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업장 내 비청년 고용 비중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효과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들에 대한 현금수당은 단시간 내에 직접적으로 실업률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현금수당이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청년의 동태적 행태분석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청년 대상의 다양한 정책패키지가 시도되었고, 현재에도 시도된 것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패키지의 조합을 변경할 때 어떠한 효과가 예상될지에 대한 정량분석 연구도 향후에 고려해볼 직하다.

본고는 비록 간접적이지만 가구소득과 청년의 여러 가지 성과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무조건부 현금지원의 효과를 살펴보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가맹점과 비가맹점간의 비교를 통하여 지역상품권 활성화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향후에는 청년 대상 현금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금지원이 청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청년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를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 IV. 경제적 여건이 청년 구직활동 및 취업성가에 미치는 영향

---

###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가. 연구목적

청년에 대한 현금지원이 청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관련 경로는 상당히 다각적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현금지원이 청년에게 미칠 수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경제적 여건이 청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배경(family background)이 청년들의 취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배경’에는 가구의 근로소득 및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종사상 지위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취업성가’는 27세 기준 취업을 하였는지 여부와 이때 일자리가 연 2,5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인지 여부로 측정하는데, 이 취업성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 졸업시점부터 취업까지의 기간도 취업성가로 고려한다. 또한 청년들이 취업한 경우 시간당임금과 월임금 수준도 가족배경과 상관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청년에 대한 현금 지원은 단기간에 취업성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현금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해당 현금 지원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조건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단, 현금 지원이 주어지는 경우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추가적인 소비 지출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하여 이전에는 저렴한 가격대의 식사메뉴를 선택했다면 추가적인 현금 지원으로 좀 더 가격대가 높은 식사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쉽게도 청년들의 시간이나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비경제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정도와 가족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취업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청년들에게 현금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이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지원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때 현금수당은 궁극적으로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취업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나. 연구방법

본 장에서 활용한 분석기법을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 1) 청년의 취업성과 분석 - 취업 여부 및 취업까지의 기간

청년의 취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는 두 가지를 고려한다. 27세 기준 취업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27세 기준 2,5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취업을 하였는가이다. 27세를 고려한 것은 25세 이전 시기는 보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취업성과를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았고, 27세 이후의 취업성과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분석데이터의 표본 규모를 고려한 탓이다.<sup>6)</sup> 남성의 군입대 기간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27세로 획일화하여 취업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은 25세 취업성과를, 남성은 27세 취업성과를 고려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2년이라는 기간 설정이 작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더미를 설명변수에 삽입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27세 기준 취업을 할 확률이 낮다면, 군대 등의 요인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6) 다음 절의 데이터 소개를 참고할 수 있다.

청년의 취업성과 분석의 설명변수로는 가족배경과 관련된 가구근로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우선 포함한다. 또한, 개인 특징으로서 청년의 27세 기준 최고 교육수준을 고려하고, 지역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교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여부도 고려한다.

취업성과가 1 아니면 0의 값을 갖고 있는 경우 간단하게는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이용한 선형확률(linear probability) 추정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OLS를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추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종속변수가 0과 1 사이의 값만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한 종속변수의 특성(limited dependent variable)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프로빗(Probit)이나 로짓(Logit) 분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종속변수가 1 (또는 0)의 값을 취할 확률을 누적분포확률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형태에 가정을 취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한편, 취업성과를 분석할 때 고임금 일자리와 기타 일자리를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상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순위를 고려한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Analysis)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선을 구분하여 어떤 청년의 설명변수의 값이 주어지면, 이와 관련된 누적분포확률함수의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이 임계점 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해당 청년의 유형을 규정하는 것이다. 순서형 프로빗 분석의 경우는 기존의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 외에 순위 간 임계수준에 대한 계수를 같이 추정하게 된다.

그런데 27세 기준 취업 여부 및 27세 기준 고임금 일자리 취업 여부로 종속변수를 상정한 회귀분석은 특정 시점의 정보만 활용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t$  시점의 취업 여부만을 확인할 때, 해당 청년이  $t+1$ 기나  $t-1$ 기에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고, 이러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량분석에서 이 정보가 활용되지는 않는 것이다.

만약 청년에 대한 패널 통계조사가 존재할 때, 27세 이전이나 이후의 정보는 이러한 정량분석에서 활용되지 않는다. 패널조사의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존분석은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생존분석은 초기

시점에서부터 어떤 사건(Event)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을 모형화하고 해당 모형과 관련된 파마리터를 추정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졸업부터 취업 여부, 혹은 고임금 일자리 취업 여부 시점까지의 걸린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혹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대학교 졸업시점을 초기시점으로 상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 졸업시점은 쉽게 유예가 가능하며, 대학교 졸업시점에 대한 결정 자체가 일자리 취업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교 졸업시점을 외생적인 '초기시점'으로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앞서 설명한 프로빗 분석의 경우에서 특정 연령에 청년들이 도달했을 때 적어도 취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생존분석에서도 취업을 한 시기가 가능한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생존분석은 경제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문에서 활용되는 분석방법론이다. 활용되는 분야에 따라 Event History Analysis, Survival Analysis, Failure-Time Analysis, Harzard Analysis 등으로 불린다. 이와 관련된 문헌이 상당히 많은데 Cameron and Trivedi(2005)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분포함수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간(duration)과 상태전환확률(transition probabilities)를 모형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둘째, 서로 다른 표본추출방법이 가능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그러한 표본추출방법과 duration 모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월에 실업에 포함되는 이들을 포착하는 유동표본추출(flow sampling), 특정 연도에 실업상태에 처한 이들을 포착하는 스톡표본추출(stock sampling), 혹은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표본추출(population sampling) 등이 있다. 셋째, 지속기간(spell duration) 데이터는 중도절단된(censored)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도절단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기간의 평균 자체를 모형화하기보다는 상태의 전환을 모형화하는 것이다. 넷째, 상태 전환과 관련된 데이터가 상당히 다양한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때, Accelerated Failure-Time(AFT) 모형이나 Proportional Hazards(PH) 모형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PH 모형인 경우 AFT 모형에 비하여 추정결과에 대한 직접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PH모형의 경우  $h(t_j) = h_0(t)g(x_j)$ 와 같이 설명변수의 효과가 hazard function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때,  $g(x_j)$ 함수는 설명변수의 비음수 함수에 해당하며 많은 경우에  $g(x_j) = \exp(x_j\beta)$ 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초기상태를 알려주는  $h_0(t)$ 에 해당 함수의 경우, 어떤 특정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 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특정 함수를 정의하는 경우 추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가 가정한 함수가 ‘참’된 함수가 아닌 경우, 회귀분석 결과 취득된 추정량은 불일치 추정량(inconsistent estimator)이 된다.

그러나  $g(\cdot)$ 와  $h_0(\cdot)$  함수를 비모수 추정법으로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준모수 추정법(semi-parametric method)을 이용하여 생존분석(Duration Analysis)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한 추정법으로, 해당 방법론을 이용하면  $h_0(t)$ 함수에 대한 특정한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모수화된  $g(x_j)$ 함수 부분만 추정하게 된다.

본고에서도 Cox PH Model을 활용하여 Duration Data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수행할 때, 데이터가 중도단절된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향후 소개될) 청년패널 조사 2007년도(1차)부터 2017년(11차)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2017년이 마지막 조사연도이므로, 고등학교 졸업연도를 2017년에서 제외한 나머지를 단절된 종속변수의 값으로 상정하였다.

## 2) 청년의 취업성과 분석 - 시간당임금과 월임금

청년의 취업 여부나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성과물인 시간당임금이나 월임금 역시 가족배경과 상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정의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잘 수행하였거나 사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높아서 시간당임금이나 월임금 수준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시간당임금이나 월임금을 종속변수를 활용할 때 로그를 취하였고,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Heckman Two-Step Estimation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선택편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간당임금이나 월임금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에게서만 관찰되기 때문이다. 파라미터의 판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 주요 회귀식(main regression equation)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를 편의 관련 회귀식(selection regression equation)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수로 혼인상태, 자녀수 등을 고려하였다. 즉, 혼인상태, 자녀수 등은 노동시장 진입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노동시장 성과물인 시간당임금이나 월임금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sup>7)</sup>

시간당임금이나 월임금을 분석할 때, 설명변수와 이러한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청년들의 시간당임금이나 월임금이 소속된 분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청년들의 시간당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당임금 기준 하위10분위 소속 청년들과 상위 10분위 소속 청년들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Quantile Regression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regression에서는 소득수준의 평균적으로 1단위 상승했을 때 취업 확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도출된 계수는 해당 효과의 평균치이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Quantile Regression은 그러한 한계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서 기능한다.

### 3) 청년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정도

경제적 지표가 아닌 다른 지표를 활용하여 가족배경이 청년들의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현재의

---

7) 논의의 일관성을 위하여 혼인, 자녀수 등이 '취업 여부'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변수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배경과 취업 여부 간의 상관성 분석이 분석 목적이기 때문에 혼인, 자녀수 등의 변수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과 '일상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건강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좋지 않음, 매우 안 좋음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매우 좋음과 좋음을 '양호한 건강상태'로 가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프로빗 분석을 통하여 양호한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확률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종속변수로서 '단계별 건강상태'를 그대로 활용하여, 순서형 프로빗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우 안 좋음'은 1, '안 좋음'은 2, '보통'은 3, '좋음'은 4, '매우 좋음'은 5로 설정하여, 수치가 상승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와 '매우 높다'인 경우에 '스트레스 높음'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상정하였다. 단계별 스트레스 상태도 '단계별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수치가 상승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같이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4)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경제적 지원금액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취업성과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27세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가 첫 번째 종속변수이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들 중의 일부는 경제적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미혼 혹은 이혼상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금액이 가족배경과 상관관계를 형성하는지도 검토해보았다.

## 2. 자료소개 및 기초통계량

### 가. 자료소개 - 청년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패널조사자료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등과 함께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 웹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실업의 원인이

복합적인 것을 감안하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설문문항은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에 대한 것이며, 본 패널조사를 통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청년패널조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차 청년패널조사는 2001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6차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 청년패널조사는 2007년 기점으로 만 15~29세 청년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추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차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2006년 산업·직업별 고용조사의 표본가구를 기반으로 조사 대상 표본이 설계되었으며 원표본 규모는 10,206명이다. 본 연구는 2차 청년패널조사(이하 청년패널 혹은 YP)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청년패널은 11차까지 제공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의 만나는 14~39세이다(〈표 IV-1〉 참조).

〈표 IV-1〉 분석 대상의 출생연도

(단위: 세(만나이))

출생연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97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979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980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981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982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98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984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985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98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98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98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989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90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99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992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99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994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료: 저자 작성

〈표 IV-2〉는 청년패널 분석표본의 기본적인 사항을 보여준다. 1988~1992년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4,167명이며 그중 총표본수 2007 청년패널(YP) 중에서 모든 조사에 응답한 경우는 1,481명(35.54%)이다. 응답차수가 6회 이상인 경우는 1,818명(43.62%), 6회 미만인 경우는 868명(29.83%)에 달한다.

〈표 IV-2〉 청년패널 분석표본 기초통계량(1)

(단위: 명)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전체 표본
총관측치	719	802	864	895	887	4,167
11회 전체 응답	243	272	304	325	337	1,481
6~10회 응답	290	343	384	403	398	1,818
1~5회 응답	186	187	176	167	152	868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나. 기초통계량

〈표 IV-3〉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청년패널조사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변수로는 여성, 만나이, 22세의 가구근로소득, 27세 기준 최종 교육수준, 14세 기준 부모의 학력 및 종사상 지위 등을 고려하였다. 패널조사이고 분석 대상에 따라 분석 대상(청년)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거나 조사연도(차수)를 기준으로 변수를 도출하였다.

기초통계량에서 조사연도 기준으로 도출된 변수는 만나이,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 자녀수, 가구원수,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경제적 지원 금액 등이다. 청년들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된 변수는 부모의 학력(14세), 부모의 종사상 지위(14세), 가구근로소득지위(22세), 취업 여부(27세), 고임금 취업 여부(27세) 등이다.

〈표 IV-3〉 청년패널조사 - 기초통계량

(단위: %, 세, 만원)

구분	1985년생	1986년생	1987년생	1988년생	1989년생	1990년생	1991년생	1992년생	1993년생	전체 <sup>3)</sup>
여성	55.08	75.75	77.64	53.89	52.68	54.87	54.40	52.68	57.63	58.24
만나이(10차)	31.00	30.00	29.00	28.00	27.00	26.00	25.00	24.00	23.00	27.08
가구근로소득(22세)	4,135	4,166	4,398	4,660	4,880	5,086	5,157	5,418	6,102	4,831
최종학교 전문대졸(10차)	9.32	13.81	24.47	20.21	21.21	19.47	22.49	17.63	16.95	18.87
최종학교 4년제졸(10차)	43.50	45.90	44.71	46.11	47.09	50.66	49.49	39.96	35.59	45.90
부학력: 전문대졸(14세)	5.65	6.34	4.53	8.81	5.36	5.75	4.91	4.46	6.78	5.69
부학력: 4년제 이상(14세)	21.19	25.37	26.28	27.98	25.64	31.19	35.17	33.71	40.68	29.10
모학력: 전문대졸(14세)	3.67	1.87	5.14	2.85	3.96	3.76	4.09	3.13	11.86	3.76
모학력: 4년제 이상(14세)	9.60	9.70	11.48	14.51	13.52	13.27	20.45	18.97	20.34	14.58
부: 상용직(14세)	54.24	61.19	51.96	52.85	52.45	58.41	54.60	58.48	64.41	55.60
모: 상용직(14세)	15.54	20.52	18.43	21.50	25.17	29.20	29.24	31.47	28.81	24.72
경찰: 자영업(10차)	0.80	0.50	2.29	1.47	2.65	6.75	13.63	29.29	40.74	9.35
경찰: 무급가족(10차)	0.80	0.50	3.05	3.54	1.85	4.00	2.86	3.10	1.85	2.65
경찰: 임금근로(10차)	76.71	79.21	70.99	74.93	74.87	69.00	60.88	52.14	42.59	67.74
배우자무(미혼,이혼)(10차)	41.24	48.51	58.01	73.58	79.49	83.19	91.21	92.41	89.83	74.07
자녀수 <sup>1)</sup> (0명 포함)(10차)	1.35	1.18	1.28	1.44	1.27	1.08	1.29	1.00	1.00	1.29
가구원수(10차)	3.14	3.23	3.44	3.41	3.52	3.60	3.69	3.73	4.02	3.52
취업 여부(27세)	71.80	72.46	74.26	72.19	74.87	72.77	0.00	0.00	0.00	47.58
고임금 취업 여부(27세)	21.31	20.14	24.49	20.25	18.75	21.48	0.00	0.00	0.00	11.88

〈표 IV-3〉의 계속

(단위: %, 세, 만원)

구분	1985년생	1986년생	1987년생	1988년생	1989년생	1990년생	1991년생	1992년생	1993년생	전체(3)
고졸-취업기간 <sup>2)</sup>	8.40	7.03	6.70	6.63	6.41	6.76	6.10	5.34	4.97	6.56
고졸-고임금 취업기간 <sup>2)</sup>	12.90	12.13	11.36	10.60	9.84	9.59	8.37	7.02	6.37	9.90
스트레스 많음(9차)	19.14	20.79	22.30	31.07	25.52	23.93	27.23	22.84	20.34	24.49
경제적 지원받음(10차)	5.22	3.47	9.16	12.09	12.43	19.50	24.18	31.67	38.89	17.18
경제적 지원금액 <sup>1)</sup> (10차)	32.69	67.86	44.58	43.54	41.91	48.40	37.01	42.38	48.81	42.68
표본수	354	268	331	386	429	452	489	448	59	3,216

주: 1) 0의 값을 갖는 경우도 포함하여 계산됨

2) 중단된 경우를 포함함. 중단된 경우 중단시점(2017년)과 고졸시점 간의 간극을 계산함

3) 1985~1993년생 표본만 고려함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3. 분석결과

#### 가.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

##### 1)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취업성과 - Probit, OLS, FE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27세에 취업을 하는지 혹은 2,500만원 이상의 일 자리에 취업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명변수로는 교육수준, 가구근로소득, 부모의 학력 및 종사상 지위, 고등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OLS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4>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가구근로소득은 취업 여부에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이 4년제 이상일 경우 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기타 다른 가족배경의 경우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4> 경제적 여건과 청년의 27세 기준 취업 여부(OLS)

설명변수	ols1	ols2	ols3	ols4	ols5	ols6
여성	0.0327**	0.0221	0.0221	0.0223	0.0222	0.0222
교육: 전문대졸	-	0.1061***	0.1061***	0.1038***	0.1034***	0.1033***
교육: 4년제 이상	-	0.0387**	0.0387**	0.0421**	0.0415**	0.0415**
가구근로소득22세	-	-	0.0000	0.0001	0.0001	0.0001
부학력: 전문대졸	-	-	-	-0.0222	-0.0236	-0.0236
부학력: 4년제 이상	-	-	-	-0.0350*	-0.0372**	-0.0372**
모학력: 전문대졸	-	-	-	0.0204	0.0209	0.0209
모학력: 4년제 이상	-	-	-	0.0042	0.0051	0.0051
부: 상용직	-	-	-	-	0.0093	0.0093
모: 상용직	-	-	-	-	-0.0145	-0.0144
고교소재지=수도권	-	-	-	-	-	-0.0009
표본수	2,973	2,973	2,973	2,973	2,973	2,973

주: 1. 종속변수는 27세에 취업을 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설정함

2.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이 포함됨

3.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표 IV-4>의 결과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취업' 확률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 자체만을 고려하는 경우 청년들의 취업성공을 제대로 가늠하기는 어렵다.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했을 때 추정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표 IV-5>에서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추가로 고려하여 2,5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취득할 확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선형확률함수를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 학력: 4년제 이상'의 설명변수 계수의 부호가 <표 IV-4>에서의 음(-)의 값을 취하였던 것과는 달리, <표 IV-5>에서는 양(+의 값을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가구근로소득이나 다른 가족배경과 관련된 변수는 <표 IV-5>에서도 여전히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경제적 여건과 청년의 27세 기준 2,500만원 이상 일자리 취업 여부(OLS)

설명변수	ols1	ols2	ols3	ols4	ols5	ols6
여성	-0.0386***	-0.0487***	-0.0495***	-0.0503***	-0.0493***	-0.0514***
교육: 전문대졸	-	-0.0182	-0.0182	-0.0122	-0.0123	-0.0106
교육: 4년제 이상	-	0.0853***	0.0845***	0.0801***	0.0806***	0.0834***
가구근로소득27세	-	-	0.0003	0.0001	0.0001	0.0001
부학력: 전문대졸	-	-	-	0.0095	0.0104	0.0095
부학력: 4년제 이상	-	-	-	0.0437**	0.0466***	0.0462***
모학력: 전문대졸	-	-	-	0.0119	0.0116	0.0096
모학력: 4년제 이상	-	-	-	0.0332	0.0325	0.0306
부: 상용직	-	-	-	-	-0.0149	-0.0128
모: 상용직	-	-	-	-	0.0117	0.0117
고교소재지=수도권	-	-	-	-	-	0.0451***
표본수	2,383	2,383	2,383	2,383	2,383	2,383

주: 1. 종속변수는 27세에 취업을 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설정함

2.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이 포함됨

3.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6〉과 〈표 IV-7〉에서는 각각 ‘취업 여부’ 및 ‘2,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일자리 취업 여부’에 대한 프로빗(Probit)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학력: 전문대졸’의 부호가 ‘취업 여부’에 관한 프로빗 분석결과에서는 음(-)인데 반하여, ‘고임금 일자리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OLS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단, 차이점은 ‘고임금 일자리 취업 여부’에 관한 분석(〈표 IV-7〉 참조)에서 ‘모학력: 4년제 이상’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OLS로 분석했을 때는 모학력과 관련된 변수가 ‘취업 여부’ 및 ‘고임금 일자리 취업 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던 것을 상기하면, 이러한 특징이 이항종속변수(binary dependent variable)를 좀 더 올바른 분석방법으로 분석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sup>8)</sup>

〈표 IV-6〉 경제적 여건과 청년의 27세 기준 취업 여부(Probit)

설명변수	pb1	pb2	pb3	pb4	pb5	pb6
여성	0.0506**	0.0364*	0.0363*	0.0368*	0.0369*	0.0371*
교육: 전문대졸	-	0.1736***	0.1736***	0.1705***	0.1693***	0.1696***
교육: 4년제 이상	-	0.0694***	0.0693***	0.0767***	0.0759***	0.0759***
가구근로소득22세	-	-	0.0000	0.0002	0.0002	0.0002
부학력: 전문대졸	-	-	-	-0.0315	-0.0344	-0.0343
부학력: 4년제 이상	-	-	-	-0.0550**	-0.0591**	-0.0592**
모학력: 전문대졸	-	-	-	0.0351	0.0366	0.0367
모학력: 4년제 이상	-	-	-	-0.0009	0.0005	0.0010
부: 상용직	-	-	-	-	0.0155	0.0153
모: 상용직	-	-	-	-	-0.0218	-0.0215
고교소재지=수도권	-	-	-	-	-	-0.0117
표본수	1,964	1,964	1,964	1,964	1,964	1,964

주: 1. 종속변수는 27세에 취업을 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설정함

2.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이 포함됨

3.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8) 동일한 설명변수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OLS, Probit에서 사용되는 표본사이즈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분석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이해된다. Probit의 경우 1과 0의 사이의 variation만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반하여, OLS의 경우는 linear probability model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0과 1 사이에 있지 않은 수치를 허용하게 된다. Probit을 사용할 때, 종속변수에 충분한 변동성(variation)이 없는 경우 해당 관측치가 회귀분석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표 IV-7〉 경제적 여건과 청년의 27세 기준 2,500만원 이상 일자리 취업 여부 (Probit)

설명변수	ols1	ols2	ols3	ols4	ols5	ols6
여성	-0.0689***	-0.0784***	-0.0790***	-0.0824***	-0.0818***	-0.0843***
교육: 전문대졸	-	-0.0157	-0.0161	-0.0098	-0.0091	-0.0145
교육: 4년제 이상	-	0.1518***	0.1503***	0.1362***	0.1377***	0.1334***
가구근로소득22세	-	-	0.0004	0.0000	0.0001	0.0000
부학력: 전문대졸	-	-	-	0.0171	0.0188	0.0130
부학력: 4년제 이상	-	-	-	0.0734**	0.0810***	0.0803***
모학력: 전문대졸	-	-	-	0.0174	0.0166	0.0137
모학력: 4년제 이상	-	-	-	0.0622*	0.0613*	0.0608*
부: 상용직	-	-	-	-	-0.0300	-0.0280
모: 상용직	-	-	-	-	0.0251	0.0233
고교소재지=수도권	-	-	-	-	-	0.1154***
표본수	1,374	1,374	1,374	1,374	1,374	1,374

주: 1. 종속변수는 (27세 기준) 연봉 2,500만원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을 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지님

2.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이 포함됨

3.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2)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취업성과 - Duration Analysis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부터 취업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Duration Analysis) 결과를 살펴보자. 〈표 IV-8〉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취업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IV-9〉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2,500만원 이상 일자리 취업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9)</sup> 한편 ‘취업’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우측단절된(right-censored) 사례로 2017에서 고등학교 졸업년도를 제한 값을 종속변수로 상정하였다.

〈표 IV-9〉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실패’할 확률, 즉 고임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즉, 취업할 확률이 높다. 가구근로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9) Duration Analysis를 수행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표본을 제거하였다.

학력이 4년제 이상일 경우, 어머니가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취업시기가 앞당겨진다. ‘가족배경’과 취업성과 간의 관계가 생존분석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표 IV-8〉 고등학교 졸업부터 취업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coefficients)

설명변수	e1	e2	e3	e4	e5
여성	0.050	0.065	0.086	0.087	0.108
교육: 전문대졸	-0.491**	-0.500**	-0.454**	-0.451**	-0.605***
교육: 4년제 이상	-0.320***	-0.371***	-0.352***	-0.358***	-0.377***
교육: 석사 이상	-0.648***	-0.698***	-0.767***	-0.766***	-0.643**
가구근로소득 22세	-	0.009***	0.008***	0.008***	0.007***
부학력: 전문대졸	-	-	0.001	-0.001	-0.135
부학력: 4년제 이상	-	-	0.056	0.053	0.041
모학력: 전문대졸	-	-	0.033	0.035	0.035
모학력: 4년제 이상	-	-	0.385***	0.371***	0.315***
부: 상용직	-	-	-	0.009	0.051
모: 상용직	-	-	-	0.144	0.108
고교소재지=수도권	-	-	-	-	1.039***
표본수	3,216	3,216	3,216	3,216	3,216

주: 1.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분석표본에서 제외.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이 포함됨. 수치는 계수값임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9〉 고등학교 졸업부터 고임금 일자리 취업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coefficients)

설명변수	e1	e2	e3	e4	e5
여성	-0.021	-0.021	-0.007	-0.008	0.054
교육: 전문대졸	0.183***	0.192***	0.218***	0.227***	0.182***
교육: 4년제 이상	0.018	0.004	-0.001	0.005	0.010
교육: 석사 이상	-0.356***	-0.377***	-0.428***	-0.427***	-0.354***
가구근로소득 22세	-	0.006***	0.005***	0.005***	0.004***

10) 고졸자를 제외하고 대졸자만 고려하여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표 IV-9〉의 계속

설명변수	e1	e2	e3	e4	e5
부학력: 전문대졸	-	-	-0.112	-0.098	-0.113
부학력: 4년제 이상	-	-	0.110**	0.119**	0.106**
모학력: 전문대졸	-	-	0.009	-0.010	-0.003
모학력: 4년제 이상	-	-	0.182***	0.160**	0.141**
부: 상용직	-	-	-	-0.028	-0.005
모: 상용직	-	-	-	0.213***	0.150***
고교소재지=수도권	-	-	-	-	1.019***
표본수	3,219	3,219	3,219	3,219	3,219

주: 1.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분석표본에서 제외.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이 포함됨. 수치는 계수값임.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반면, 단순 ‘취업’시점만을 고려한 〈표 IV-8〉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패할 확률(비취업 상태를 빠져나갈 확률)이 전문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하여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설명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가구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고교소재지가 수도권일수록 취업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노동시장 진입 후 임금수준에 대한 취업성과 - OLS/Heckman Two-Step Estimation

취업한 청년들의 시간당임금이나 임금수준에도 가족배경이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표 IV-10〉~〈표 IV-13〉에서는 관련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 경우의 8번째 회귀식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선택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가구근로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4년제 이상일 경우 청년들의 시간당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IV-10〉 참조). 그러나 선택편의를 고려한 경우(〈표 IV-11〉 참조), 이 두 개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신 어머니가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 국한하여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임금의 경우는, 선택편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족배경 관련 변수 중에서도 어머니의 학력이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에만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2) 참조. 그러나 선택편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는 사라지고, 대신 아버지가 4년제 이상의 대졸 학력을 가지고 있을 때 종속변수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3) 참조).

〈표 IV-10〉 청년의 시간당임금(log(wage))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OLS)

설명변수	Ols wage1	Ols wage2	Ols wage3	Ols wage4	Ols wage5	Ols wage6	Ols wage7	Ols wage8
교육: 전문대졸	0.2742***	0.2901***	0.2706***	0.2739***	0.2749***	0.2871***	0.2911***	0.2917***
교육: 4년제 이상	0.6376***	0.6306***	0.6305***	0.6170***	0.6185***	0.6247***	0.6241***	0.6248***
교육: 석사 이상	0.9896***	0.9217***	0.9806***	0.9477***	0.9507***	0.9149***	0.9011***	0.9024***
만나이	0.3047***	0.2824***	0.3310***	0.3326***	0.3345***	0.3040***	0.3065***	0.3073***
만나이 제곱항	-0.0045***	-0.0041***	-0.0047***	-0.0047***	-0.0048***	-0.0043***	-0.0043***	-0.0044***
여성	-0.3074***	-0.2899***	-0.3172***	-0.3157***	-0.3153***	-0.2978***	-0.2966***	-0.2965***
가구근로소득 22세	-	-	0.0025**	0.0022**	0.0022**	0.0020*	0.0019*	0.0019*
부학력: 전문대졸	-	-	-	0.0493	0.0523	-	-0.0046	-0.0034
부학력: 4년제 이상	-	-	-	-0.0362	-0.0314	-	-0.0969	-0.0952
모학력: 전문대졸	-	-	-	0.0610	0.0587	-	0.0714	0.0704
모학력: 4년제 이상	-	-	-	0.2504***	0.2480***	-	0.2190**	0.2177**
부: 상용직	-	-	-	-	-0.0179	-	-	-0.0039
모: 상용직	-	-	-	-	0.0289	-	-	0.0164
표본수	3,574	3,571	3,574	3,574	3,574	3,571	3,571	3,571

주: 1.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 및 직장 소재지 변수가 포함됨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11〉 청년의 시간당임금(log(wage))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Heckman 2SLS)

설명변수	HK_1	HK_2	HK_3	HK_4	HK_5	HK_6	HK_7	HK_8
Main Equation								
교육: 전문대졸	0.3600***	0.3844***	0.3589***	0.3616***	0.3771***	0.3838***	0.3875***	0.4025***
교육: 4년제 이상	0.7024***	0.7018***	0.7058***	0.6985***	0.7020***	0.7042***	0.7156***	0.7202***
교육: 석사 이상	0.7244***	0.6073***	0.7233***	0.7053***	0.7055***	0.6068***	0.6062***	0.6087***
만나이	0.2919	0.2891	0.3928	0.3896	0.3962	0.3523	0.3550	0.3641
만나이 제곱항	-0.0043	-0.0042	-0.0056	-0.0056	-0.0056	-0.005	-0.0051	-0.0052
여성	0.2783	-0.0847	0.2428	0.2385	0.1924	-0.1066	-0.0875	-0.1343
가구근로소득 22세	-	-	0.0026	0.0023	0.0025	0.0017	0.0012	0.0015
부학력: 전문대졸	-	-	-	0.0156	0.0199	-	-0.0322	-0.0252
부학력: 4년제 이상	-	-	-	-0.1546	-0.1626	-	-0.2267	-0.2319
모학력: 전문대졸	-	-	-	0.0906	0.0362	-	0.1617	0.1045
모학력: 4년제 이상	-	-	-	0.3978*	0.3794*	-	0.3167	0.2981
부: 상용직	-	-	-	-	0.0736	-	-	0.0610
모: 상용직	-	-	-	-	0.1793	-	-	0.1909*
Selection Equation								
혼인상태: 미혼	-6.7464	-6.7464	-6.7464	-6.7464	-6.7464	-6.7464	-6.7464	-6.7464
혼인상태: 이혼	0.7123**	0.7123**	0.7123**	0.7123**	0.7123**	0.7123**	0.7123**	0.7123**
자녀수	-0.1764**	-0.1764**	-0.1764**	-0.1764**	-0.1764**	-0.1764**	-0.1764**	-0.1764**
가구원수	0.1014	0.1014	0.1014	0.1014	0.1014	0.1014	0.1014	0.1014
교육: 전문대졸	0.0169	0.0169	0.0169	0.0169	0.0169	0.0169	0.0169	0.0169

〈표 IV-11〉의 계속

설명변수	HK_1	HK_2	HK_3	HK_4	HK_5	HK_6	HK_7	HK_8
교육: 4년제 이상	0.0835	0.0835	0.0835	0.0835	0.0835	0.0835	0.0835	0.0835
교육: 석사 이상	-0.2437	-0.2437	-0.2437	-0.2437	-0.2437	-0.2437	-0.2437	-0.2437
만나이	0.2545	0.2545	0.2545	0.2545	0.2545	0.2545	0.2545	0.2545
만나이 제곱항	-0.0035	-0.0035	-0.0035	-0.0035	-0.0035	-0.0035	-0.0035	-0.0035
여성	-1.3550***	-1.3550***	-1.3550***	-1.3550***	-1.3550***	-1.3550***	-1.3550***	-1.3550***
표본수	1,792	1,792	1,792	1,792	1,792	1,792	1,792	1,792
미관측 표본수	870	870	870	870	870	870	870	870
lambda( $\lambda$ )	-0.8354	-0.2892	-0.7923	-0.7802	-0.73	-0.2626	-0.2787	-0.2271
rho( $\rho$ )	-0.5900	-0.2291	-0.5648	-0.5584	-0.5287	-0.2086	-0.2214	-0.1816
chi2( $\chi^2$ )	44.85	107.71	45.71	49.0	53.24	108.00	111.32	115.73

주: 1. main, selection 회귀식에 상수항 및 직장 소재지 변수가 포함됨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12〉 청년 임금(log(earning))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OLS)

설명변수	Olswage2_1	Olswage2_2	Olswage2_3	Olswage2_4	Olswage2_5	Olswage2_6	Olswage2_7	Olswage2_8
교육: 전문대졸	0.2644***	0.2789***	0.2611***	0.2646***	0.2657***	0.2762***	0.2805***	0.2812***
교육: 4년제 이상	0.5806***	0.5738***	0.5741***	0.5600***	0.5619***	0.5685***	0.5675***	0.5686***
교육: 석사 이상	0.9046***	0.8363***	0.8963***	0.8621***	0.8663***	0.8301***	0.8153***	0.8178***
만나이	0.2931***	0.2716***	0.3173***	0.3190***	0.3214***	0.2910***	0.2936***	0.2948***
만나이 제곱항	-0.0043***	-0.0039***	-0.0045***	-0.0045***	-0.0045***	-0.0041***	-0.0041***	-0.0041***
여성	-0.3496***	-0.3329***	-0.3586***	-0.3571***	-0.3563***	-0.3399***	-0.3388***	-0.3384***
가구근로소득 22세	-	-	0.0023**	0.0020*	0.0020*	0.0018*	0.0017	0.0017
부학력: 전문대졸	-	-	-	0.0571	0.0613	-	0.002	0.0045
부학력: 4년제 이상	-	-	-	-0.0352	-0.0277	-	-0.0972	-0.0928
모학력: 전문대졸	-	-	-	0.0437	0.0413	-	0.0525	0.0514
모학력: 4년제 이상	-	-	-	0.2570***	0.2544***	-	0.2265***	0.2249***
부: 상용직	-	-	-	-	-0.0322	-	-	-0.0174
모: 상용직	-	-	-	-	0.0313	-	-	0.0183
표본수	3,574	3,571	3,574	3,574	3,574	3,571	3,571	3,571

주: 1.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 및 직장 소재지 변수가 포함됨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13〉의 계속

설명변수	HK_1	HK_2	HK_3	HK_4	HK_5	HK_6	HK_7	HK_8
교육: 4년제 이상	0.0835	0.0835	0.0835	0.0835	0.0835	0.0835	0.0835	0.0835
교육: 석사 이상	-0.2437	-0.2437	-0.2437	-0.2437	-0.2437	-0.2437	-0.2437	-0.2437
만나이	0.2545	0.2545	0.2545	0.2545	0.2545	0.2545	0.2545	0.2545
만나이 제곱항	-0.0035	-0.0035	-0.0035	-0.0035	-0.0035	-0.0035	-0.0035	-0.0035
여성	-1.3550***	-1.3550***	-1.3550***	-1.3550***	-1.3550***	-1.3550***	-1.3550***	-1.3550***
표본수	1792	1127	1792	1792	1792	1127	1127	1127
미관측 표본수	870	205	870	870	870	205	205	205
lambda( $\lambda$ )	-0.9167	-1.8112	-0.8888	-0.8693	-0.7576	-1.8161	-1.8175	-1.7183
rho( $\rho$ )	-0.6402	-1	-0.6247	-0.6149	-0.5497	-1	-1	-1
chi2( $\chi^2$ )	36.5743	71.122	37.1903	40.7117	44.9432	70.8398	73.1058	84.3242

주: 1. main, selection 회귀식에 상수항 및 직장 소재지 변수가 포함됨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4) 가족배경과 시간당임금/월임금 분위 - Quantile Regression

시간당임금과 월임금의 분위에 따라 가족배경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활용한다.

〈표 IV-14〉는 각 분위별로 독립적으로 계수를 분석한 것이다. OLS가 종속변수의 '평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분위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특정 분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IV-14〉에서는 25분위, 50분위, 75분위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일수록 25분위, 50분위, 75분위에서의 시간당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소재지가 서울이나 경기인 경우에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가족배경 변수를 추가한 경우에도 이들 변수의 각 분위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가족배경이 각 분위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가구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50분위의 시간당임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25분위나 75분위의 시간당임금에는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어느 경우에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어머니의 학력은 분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25분위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최소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50분위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최소 4년제 이상이 되어야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75분위 시간당임금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효과를 비롯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신 가구근로소득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5분위의 경우 가구근로소득의 계수값이 0.0007인 데 반하여, 50분위에서는 0.0004, 75분위에서는 0.0024로, 75분위의 계수가 25분위 대비 3배, 50분위 대비 6배 높다.

〈표 IV-15〉에서는 분위 간의 계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가설검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5분위와 50분위 간, 25분위와 75분위 간, 50분위와 75분위 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구근로소득의 경우 25분위-50분위 간, 혹은 25분위-75분위 간 계수의 실질적 차이는 없지만, 50분위-75분위 간 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75분위 시간당임금에 미치는 가구근로소득의 효과는 25분위와는 별로 차이는 없지만, 50분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의 경우 25분위, 50분위, 75분위 시간당임금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계수를 추정한 것은 아니므로 신뢰구간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림 IV-1]에서는 25분위, 50분위, 75분위 시간당임금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을 한꺼번에 추정하여 관련된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가구근로소득의 경우 25분위, 50분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75분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가구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청년의 시간당임금이 높아진다면 이는 상위소득에 국한된 효과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의 경우, 신뢰구간이 넓어서 시간당임금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다.

〈표 IV-14〉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1

변수		25분위	50분위	7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교육 <sup>1)</sup>	전문대졸	0.0774***	0.1329***	0.2709***	0.0890***	0.1355***	0.2619***
	4년제졸	0.2570***	0.4055***	0.5085***	0.2565***	0.4036***	0.4883***
	석사 이상	0.4655***	2.0486***	0.6570***	0.4504***	1.8334***	0.6184***
만나이		0.1109***	0.1925**	0.1786***	0.1153***	0.2030***	0.2224***
만나이 제곱항		-0.0015***	-0.0027**	-0.0025***	-0.0015***	-0.0028***	-0.0029***
여성		-0.1784***	-0.2487***	-0.1926***	-0.1815***	-0.2429***	-0.2019***
직장소재지 <sup>2)</sup>	서울	0.1228***	0.3083	0.1788***	0.1142***	0.3128	0.1582***
	부산	-0.0348	-0.0452	-0.2864	-0.0376	-0.0348	-0.2608
	대구	-0.0839***	-0.1354***	-2.0798***	-0.0915**	-0.1217**	-2.0764***
	인천	0.0262	0.0762	-0.0967	0.0107	0.0871**	-0.0923
	광주	-0.0812***	-0.1610**	-2.1133***	-0.0841***	-0.1625***	-2.1233***
	대전	0.0415	0.6301	0.1357***	0.0408	0.8082	0.1119**
	울산	-0.0414	-0.0939	0.0076	-0.0616*	-0.0775	-0.0342
	경기	0.1383***	0.3090*	0.0885*	0.1363***	0.3179*	0.0841*
가구근로소득		-	-	-	0.0007**	0.0004	0.0024***
부학력=전문대졸 <sup>3)</sup>		-	-	-	-0.0333	-0.0538	0.0965

〈표 IV-14〉의 계속

변수	25분위	50분위	75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부학력=4년제 <sup>3)</sup>	-	-	-	-0.022	-0.0814	0.0176
모학력=전문대졸 <sup>3)</sup>	-	-	-	0.1270***	0.1059	0.032
모학력=4년제 <sup>3)</sup>	-	-	-	0.0851**	0.3108***	0.0305
부-상용직근로자	-	-	-	0.0074	0.0251	-0.0062
모-상용직근로자	-	-	-	0.0023	0.0000	0.0305
상수	-1.9889***	-3.1229***	-0.7728	-2.1448***	-3.3774***	-1.6933**
표본수	3,571	3,571	3,571	3,571	3,571	3,571

주: 1. 본 표는 25분위, 50분위, 75분위에 대한 회귀식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를 보여줌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1) 교육의 reference group은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미만자임  
 2) 직장 소재지의 reference group은 나머지 광역도에 해당함  
 3) 부 혹은 모의 학력의 reference group은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미만자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15〉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2

변수		25분위 vs 50분위A	25분위 vs 75분위A	50분위 vs 75분위A	25분위 vs 50분위B	25분위 vs 75분위B	50분위 vs 75분위B
교육 <sup>1)</sup>	전문대졸	0.0555	0.1935***	0.138	0.0465	0.1729*	0.1264*
	4년제졸	0.1485**	0.2514***	0.103	0.1471***	0.2319**	0.0848
	석사 이상	1.5831**	0.1914**	-1.3917**	1.3830**	0.168	-1.2150*
만나이		0.0816*	0.0677	-0.0139	0.0877*	0.1071	0.0194
만나이 제공항		-0.0012	-0.001	0.0002	-0.0013	-0.0015	-0.0002
여성		-0.0703*	-0.0142	0.0561	-0.0614*	-0.0203	0.041
직장 소재지 <sup>2)</sup>	서울	0.1855**	0.056	-0.1295*	0.1986***	0.0441	-0.1545***
	부산	-0.0104	-0.2516	-0.2412	0.0028	-0.2233	-0.2261
	대구	-0.0515	-1.9959***	-1.9444***	-0.0302	-1.9849***	-1.9547***
	인천	0.050	-0.1229	-0.1729	0.0764	-0.103	-0.1794
	광주	-0.0798	-2.0321***	-1.9523***	-0.0784	-2.0391***	-1.9608***
	대전	0.5886	0.0941	-0.4945	0.7673	0.0711	-0.6962
	울산	-0.0525	0.0489	0.1014	-0.0158	0.0274	0.0432
경기	0.1707**	-0.0498	-0.2205***	0.1817***	-0.0522	-0.2339***	
가구근로소득 22세		-	-	-	-0.0003	0.0017	0.0020**
부학력=전문대졸 <sup>3)</sup>		-	-	-	-0.0205	0.1298***	0.1503
부학력=4년제 <sup>3)</sup>		-	-	-	-0.0594**	0.0395	0.0990*

〈표 IV-15〉의 계속

변수	25분위 vs 50분위A	25분위 vs 75분위A	50분위 vs 75분위A	25분위 vs 50분위B	25분위 vs 75분위B	50분위 vs 75분위B
모학력=전문대졸 <sup>3)</sup>	-	-	-	-0.0211	-0.095	-0.0739
모학력=4년제 <sup>3)</sup>	-	-	-	0.2257**	-0.0547	-0.2803
부-상용직근로자	-	-	-	0.0178	-0.0135	-0.0313
모-상용직근로자	-	-	-	-0.0023	0.0282	0.0305
상수	-1.1339	1.2161	2.3501**	-1.2325*	0.4515	1.6840*
표본수	3,571	3,571	3,571	3,571	3,571	3,571

주: 1. 본 분석은 25분위, 50분위 75분위에 대한 회귀식의 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한 것임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1) 교육의 reference group은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미만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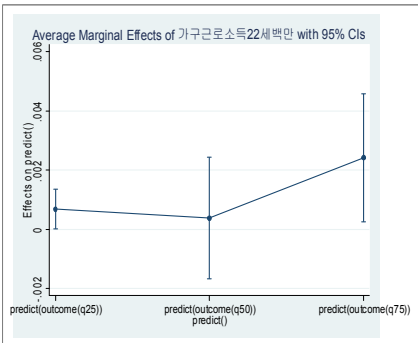
2) 직장 소재지의 reference group은 나머지 광역도에 해당함

3) 부 혹은 모의 학력의 reference group은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미만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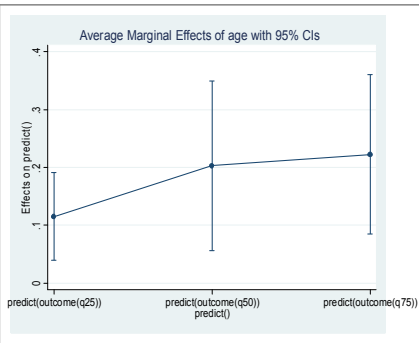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IV-1〕 분위회귀분석: 추정치와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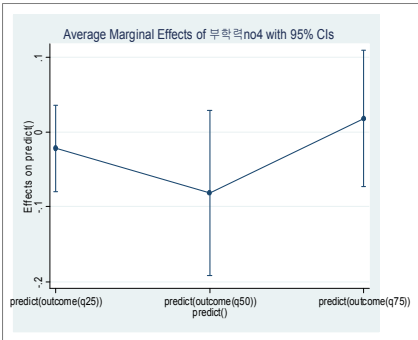
(A) 22세 기준 가구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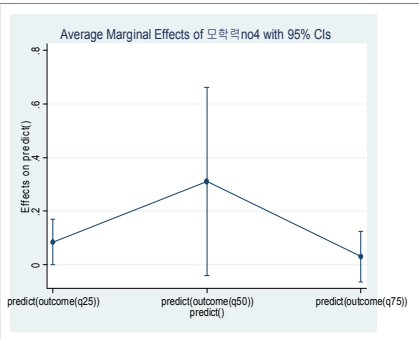
(B) 만나이



(C) 부학력 = 4년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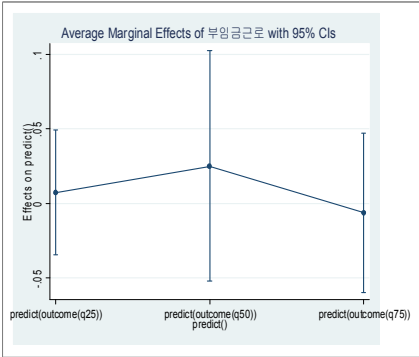


(D) 모학력 = 4년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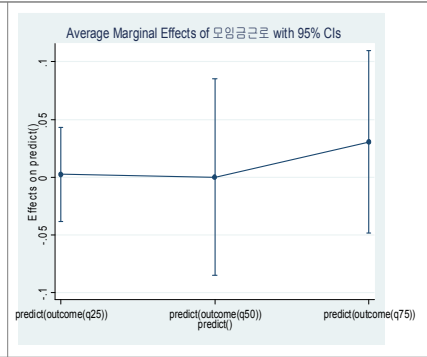


[그림 IV-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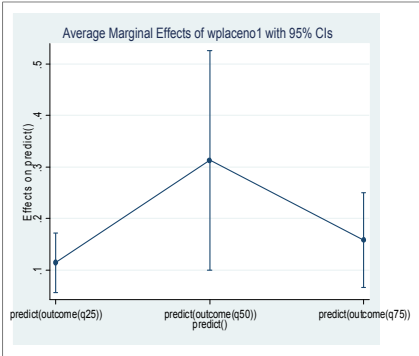
(E) 부의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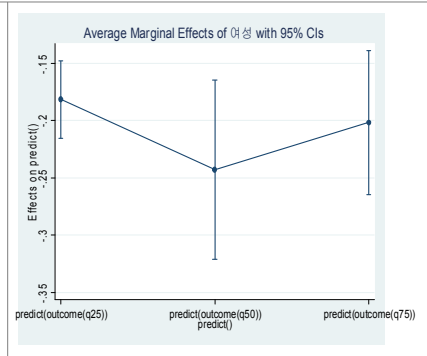
(F) 모의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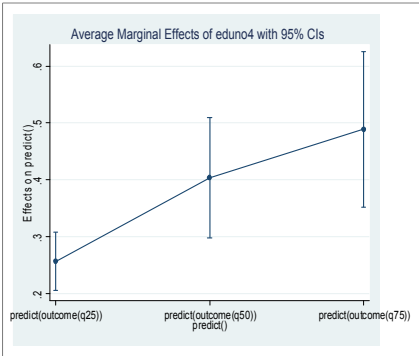
(G) 직장 소재지 =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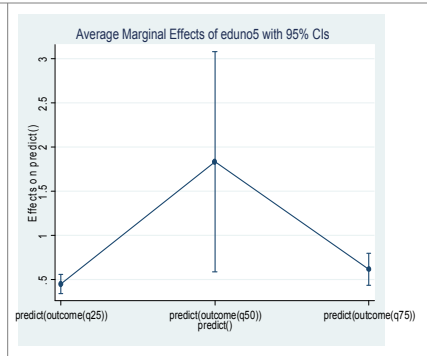
(H) 여성



(I) 학력수준 = 4년제졸



(J) 학력수준 = 석사 이상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나. 청년의 건강상태

### 1) 주관적 건강상태 - Probit Analysis

다음으로 청년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회귀식 결과를 살펴보자(〈표 IV-16〉 참조). 종속변수는 건강상태가 ‘ 좋음 ’ 혹은 ‘ 매우 좋음 ’이라고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지니는 터미변수로 상정하였다. 교육수준, 만나이, 성별, 가구근로소득, 부모의 학력과 종사상 지위, 경제활동 상태 등을 설명변수로 삽입하였다. 10번째 회귀식(Hpb\_10)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고졸자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고졸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이 양호할 확률이 낮아지되(만나이 계수 $<0$ ), 단 연령에 따른 감소효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만나이 제곱항 계수 $>0$ ).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낮게 보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교육 및 연령 효과의 방향은 해당 변수가 포함된 모든 회귀식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가구근로소득과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회귀식 Hpb\_10에서 청년들의 건강상태에 통계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관련된 추정결과는 해당 변수가 포함된 모든 회귀식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가구근로소득의 경우 교육 및 만나이, 성별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는 ‘양호한 건강상태’ 확률을 높이는 것처럼 나타났으나, 일단 개인의 기본적인 특질이 통제된 이후에는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의 학력이 4년제 이상일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변수가 포함된 모든 회귀식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상태와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할 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업상태’ 대비하여 자영업 상태나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부모의 종사상 지위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회귀식 Hpb\_8과 회귀식 Hpb\_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종사상 지위 변수가 포함된 회귀식 Hpb\_10에서는 ‘임금근로자’ 더미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아주 안 좋다,’ ‘안 좋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한 편이다’라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변수를 종속변수에 사용하였는데, 이때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종속변수의 값이 상승하도록 설정하였다. 응답이 2개 이상이고 응답 간 서열이 존재하는 만큼 순서형 프로빗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표 IV-17>에서는 관련 결과가 나타나 있다.

먼저, 모형의 적합성(model fit)을 판단하는 카이제곱( $\chi^2$ ) 수준이 10번째 회귀식(Hopb\_10)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6>에서 기본적인 개인 특질이 제외되고 가족배경 변수가 포함된 Hpb\_3, Hpb\_4의  $\chi^2$  수준이 30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던 것과 달리, <표 IV-19>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회귀식(Hopb\_3, Hopb\_4)의  $\chi^2$  수준이 50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sup>11)</sup> 개인적인 특질이 통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다수응답 간 서열이 존재하는 경우 임의로 응답을 구분하여 일반적인 프로빗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보다 원래의 응답 자체를 고려한 순서형 프로빗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10번째 회귀식 Hopb\_10의 결과를 살펴보자. 4년제 졸업자는 고졸자에 비하여 건강상태 수준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이 높고 여성일수록 건강상태 수준이 양호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빗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가구근로소득과 부모의 학력수준은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11) 해당 표에서의 숫자는 ‘average marginal effect’를 의미한다.

나빠지는 경향이 순서형 프로빗 분석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단, 아버지가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는 건강상태가 '안 좋을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별 더미변수의 계수를 살펴보자. 프로빗 분석에서는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만 건강상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서형 프로빗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 모든 취업활동 상태가 비취업 상태에 비하여 건강 상태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건강상태에 대한 결정요인(Probit/marginal effects)

설명변수	Hpb_1	Hpb_2	Hpb_3	Hpb_4	Hpb_5	Hpb_6	Hpb_7	Hpb_8	Hpb_9	Hpb_10
전문대졸	0.0212	-	-	-	0.0208	0.0193	0.0186	0.0154	0.0144	0.0139
4년제졸	0.0349***	-	-	-	0.0340***	0.0361***	0.0358***	0.0252*	0.0278**	0.0276**
석사 이상	0.0235	-	-	-	0.0223	0.0275	0.0284	0.0089	0.0146	0.0154
만나이	-0.0396**	-	-	-	-0.0357*	-0.0378*	-0.0376*	-0.0368*	-0.0381*	-0.0379*
만나이 제곱항	0.0005*	-	-	-	0.0005	0.0005*	0.0005*	0.0005	0.0005*	0.0005*
여성	-0.0504***	-	-	-	-0.0513***	-0.0520***	-0.0519***	-0.0344***	-0.0350***	-0.0350***
가구근로소득 22세	-	0.0038***	0.0040***	0.0040***	0.0003	0.0004	0.0004	0.0003	0.0003	0.0003
부학력=전문대졸	-	-	-0.0073	-0.0053	-	0.0152	0.0159	-	0.0115	0.0120
부학력=4년제	-	-	-0.0256	-0.0222	-	-0.0031	-0.0006	-	-0.0021	0.0000
모학력=전문대졸	-	-	-0.0093	-0.0083	-	0.0133	0.0138	-	0.0156	0.0161
모학력=4년제	-	-	-0.0482**	-0.0482**	-	-0.0352*	-0.0341*	-	-0.0351*	-0.0340*
부-상용직근로자	-	-	-	-0.0179	-	-	-0.0162	-	-	-0.0140
모-상용직근로자	-	-	-	0.0031	-	-	-0.0094	-	-	-0.0097
경찰: 지역업	-	-	-	-	-	-	-	0.0461	0.0499*	0.0501*
경찰: 무급가족	-	-	-	-	-	-	-	0.1500***	0.1508***	0.1490***
경찰: 임금근로	-	-	-	-	-	-	-	0.0663***	0.0659***	0.0000
표본수	5,747	7,829	7,829	7,829	5,747	5,747	5,747	5,747	5,747	5,747
카이제곱( $\chi^2$ )	71.38	303.38	318.58	321.13	72.64	78.09	81.19	113.11	117.61	119.62

주: 1. 본 계수는 각 변수에 대한 marginal effect에 해당함. 종속변수는 건강상태가 ' 좋음 ' 혹은 ' 매우 좋음 ' 이라고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지님 \*. \*\*,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17〉 건강상태에 대한 결정요인(Ordered Probit)

설명변수	Hopb_1	Hopb_2	Hopb_3	Hopb_4	Hopb_5	Hopb_6	Hopb_7	Hopb_8	Hopb_9	Hopb_10
전문대졸	0.0355	-	-	-	0.0345	0.0351	0.0343	0.0311	0.0323	0.0322
4년제졸	0.1470***	-	-	-	0.1442***	0.1470***	0.1477***	0.1302***	0.1339***	0.1354***
석사 이상	0.1533*	-	-	-	0.1495*	0.1549*	0.1591*	0.1175	0.1240	0.1289
만나이	-0.1424**	-	-	-	-0.1320**	-0.1316**	-0.1297**	-0.1243**	-0.1232**	-0.1209**
만나이 제곱항	0.0019**	-	-	-	0.0018*	0.0018*	0.0017*	0.0017*	0.0017*	0.0016*
여성	-0.2412***	-	-	-	-0.2444***	-0.2444***	-0.2441***	-0.1932***	-0.1929***	-0.1929***
가구근로소득 22세	-	0.0033***	0.0033***	0.0033***	0.0010	0.0010	0.0011	0.0009	0.0009	0.0010
부학력=전문대졸	-	-	-0.0372	-0.0308	-	-0.0452	-0.0396	-	-0.0566	-0.0512
부학력=4년제	-	-	0.0274	0.0397	-	-0.0090	0.003	-	-0.0096	0.0015
모학력=전문대졸	-	-	-0.0337	-0.0338	-	-0.0346	-0.0341	-	-0.0306	-0.0303
모학력=4년제	-	-	0.0113	0.0108	-	-0.0106	-0.0103	-	-0.0125	-0.0124
부-상용직근로자	-	-	-	-0.0624**	-	-	-0.0644**	-	-	-0.0599*
모-상용직근로자	-	-	-	0.0206	-	-	0.0089	-	-	0.0090
경찰: 자영업	-	-	-	-	-	-	-	0.2324**	0.2369**	0.2391***
경찰: 무급가족	-	-	-	-	-	-	-	0.4866***	0.4869***	0.4805***
경찰: 임금근로	-	-	-	-	-	-	-	0.2029***	0.2034***	0.2019***
절단점 1 (아주 안 좋다, 안 좋다)	-5.4954***	-2.7692***	-2.7661***	-2.7912***	-5.2410***	-5.2416***	-5.2432***	-4.9274***	-4.9154***	-4.9093***
절단점 2 (안 좋다, 보통이다)	-4.5941***	-1.8628***	-1.8597***	-1.8851***	-4.3393***	-4.3398***	-4.3420***	-4.0203***	-4.0082***	-4.0027***

〈표 IV-17〉의 계속

설명변수	Hopb_1	Hopb_2	Hopb_3	Hopb_4	Hopb_5	Hopb_6	Hopb_7	Hopb_8	Hopb_9	Hopb_10
절단점 3 (보통이다, 건강한편)	-3.5965***	-0.8692***	-0.8662***	-0.8916***	-3.3415***	-3.3419***	-3.3441***	-3.0166***	-3.0044***	-2.9989***
절단점 4 (건강한 편, 매우 건강)	-1.5582*	1.1440***	1.1473***	1.1230***	-1.3029	-1.3031	-1.3041	-0.9697	-0.9573	-0.9508
표본수	5747	5747	5747	5747	5747	5747	5747	5747	5747	5747
카이제곱( $\chi^2$ )	139.66	40.65	42.20	45.99	141.20	141.51	147.00	184.89	185.60	190.51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2) 일상적인 스트레스 경험 여부 - Probit Analysis

다음으로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응답을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지닌다. <표 IV-18>은 해당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카이제곱( $\chi^2$ ) 수치가 가장 높은 10번째 회귀식(Spb\_10)을 중심으로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년제 졸업자의 경우는 고졸자 대비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배경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인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성을 띤다.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인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상태별로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해 보면, 비경제활동 상태인 청년에 비하여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인 청년들은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반면,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응답 역시 원래 2개 이상의 서열화된 응답유형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종속변수의 수치가 높게 설명하여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IV-19>에서 제시되어 있다. 10번째 회귀식(Sopb\_10)이 <표 IV-19>에서도  $\chi^2$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만큼, 10번째 회귀식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편이며, 전문대졸이나 4년제졸의 학력을 가진 청년도 고졸 이하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편이다. 단,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고졸 이하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과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프로빗 분석(<표 IV-19> 참조)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순서형 프로빗에서는 전문대졸 더미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다르다.

한편, 모의 학력수준이 전문대졸인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낮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해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임금근로자는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프로빗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IV-18〉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Probit/marginal effects)

설명변수	Spb_1	Spb_2	Spb_3	Spb_4	Spb_5	Spb_6	Spb_7	Spb_8	Spb_9	Spb_10
전문대졸	-0.0031	-	-	-	-0.0023	-0.0031	-0.0034	-0.0193	-0.0190	-0.0195
4년제졸	-0.0204	-	-	-	-0.0182	-0.0171	-0.0175	-0.0393**	-0.0385**	-0.0391**
석사 이상	-0.0199	-	-	-	-0.0174	-0.0132	-0.0138	-0.0363	-0.0333	-0.0343
만나이	-0.0048	-	-	-	-0.0117	-0.013	-0.0138	-0.0261	-0.0259	-0.027
만나이 제곱항	0.0001	-	-	-	0.0002	0.0002	0.0002	0.0004	0.0004	0.0004
여성	-0.0402***	-0.0402***	-0.0402***	-	-0.0382***	-0.0385***	-0.0385***	-0.0347***	-0.0349***	-0.0348***
가구근로소득 22세	-	-0.0004**	-0.0003	-0.0003	-0.0006**	-0.0006*	-0.0006*	-0.0005*	-0.0005	-0.0005
부학력=전문대졸	-	-	0.0074	0.0061	-	0.0114	0.0099	-	-0.0013	-0.0034
부학력=4년제	-	-	-0.0035	-0.0050	-	-0.0006	-0.0022	-	0.0045	0.0023
모학력=전문대졸	-	-	-0.0622	-0.0618	-	-0.0625	-0.0620	-	-0.0760*	-0.0752*
모학력=4년제	-	-	-0.0208	-0.0200	-	-0.0232	-0.0223	-	-0.0156	-0.0142
부-상용직근로자	-	-	-	0.0066	-	-	0.0073	-	-	0.0098
모-상용직근로자	-	-	-	-0.0121	-	-	-0.0147	-	-	-0.0201
경찰: 자영업	-	-	-	-	-	-	-	-0.0861**	-0.0839**	-0.0845**
경찰: 무급가족	-	-	-	-	-	-	-	-0.0505	-0.0519	-0.0502
경찰: 임금근로	-	-	-	-	-	-	-	0.0381***	0.0378**	0.0380***
표본수	5,806	5,806	5,806	5,806	5,806	5,806	5,806	5,604	5,604	5,604
카이제곱( $\chi^2$ )	16.26	4.05	8.01	8.85	19.92	24.10	25.17	39.94	43.93	46.05

주: 1. 종속변수는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지님. 본 계수는 각 변수에 대한 marginal effect에 해당함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19〉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Ordred Probit)

설명변수	Sopb_1	Sopb_2	Sopb_3	Sopb_4	Sopb_5	Sopb_6	Sopb_7	Sopb_8	Sopb_9	Sopb_10
전문대졸	-0.0215	-	-	-	-0.0199	-0.024	-0.0239	-0.0771*	-0.0783*	-0.0784*
4년제졸	-0.0453	-	-	-	-0.0411	-0.0381	-0.0386	-0.1126***	-0.1107**	-0.1115***
석사 이상	-0.0036	-	-	-	0.0013	0.0151	0.0134	-0.0625	-0.0527	-0.0555
만나이	-0.0194	-	-	-	-0.0335	-0.0382	-0.0391	-0.0946	-0.0953	-0.0967
만나이 제곱항	0.0003	-	-	-	0.0004	0.0005	0.0005	0.0014	0.0014	0.0014
여성	-0.1059***	-	-	-	-0.1017***	-0.1030***	-0.1032***	-0.0866***	-0.0873***	-0.0873***
가구근로소득 22세	-	-0.0005	-0.0003	-0.0003	-0.0013*	-0.0011	-0.0011	-0.0012	-0.0011	-0.0011
부학력=전문대졸	-	-	0.0317	0.0290	-	0.0387	0.0356	-	0.0084	0.0048
부학력=4년제	-	-	0.0025	-0.0018	-	0.0045	0.0000	-	0.0216	0.0161
모학력=전문대졸	-	-	-0.1253	-0.126	-	-0.1245	-0.1249	-	-0.1545*	-0.1546*
모학력=4년제	-	-	-0.0873	-0.0875	-	-0.0973	-0.0969	-	-0.0821	-0.0812
부-상용직근로자	-	-	-	0.0240	-	-	0.0253	-	-	0.0296
모-상용직근로자	-	-	-	-0.0029	-	-	-0.0109	-	-	-0.0152
경찰: 자영업	-	-	-	-	-	-	-	-0.2476***	-0.2414***	-0.2424***
경찰: 무급가족	-	-	-	-	-	-	-	-0.0922	-0.0938	-0.0905
경찰: 임금근로	-	-	-	-	-	-	-	0.1605***	0.1599***	0.1607***
절단점 1 (거의 없다, 낮음)	-1.9197**	-1.5390***	-1.5447***	-1.5344***	-2.2614**	-2.3451***	-2.3509***	-3.1853***	-3.2031***	-3.2142***
절단점 2 (낮음, 높음)	0.2861	0.6632***	0.6587***	0.6692***	-0.0548	-0.1372	-0.1429	-0.9611	-0.9779	-0.9887
절단점 3 (높음, 매우 높음)	1.5404*	1.9159***	1.9119***	1.9224***	1.1997	1.1179	1.1124	0.2969	0.2807	0.2701
표본수	5,806	5,806	5,806	5,806	5,806	5,806	5,806	5,604	5,604	5,604
카이제곱( $\chi^2$ )	14.86	1.19	5.58	6.14	17.70	22.59	23.44	53.32	58.09	59.44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다.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 1) 경제적 지원 여부 - Probit Analysis

청년에 대한 현금지원의 여러 효과를 분석할 때는 청년들 본인뿐만 아니라 청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모 세대 역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부모가 청년들에 대한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청년에 대한 현금지원이 부모로부터의 지원금액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석을 수행한다. 관련 분석결과가 <표 IV-20>~<표 IV-21>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표 IV-20>의 경우에는 배우자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를, <표 IV-21>은 배우자 여부가 포함된 결과를 보고한다.

<표 IV-20>의 결과를 살펴보자.  $\chi^2$ 가 높은 축에 속하면서 통제변수 개수가 가장 많은 10번째 회귀식(ESpb\_10)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청년이 4년제 졸업자인 경우는 고졸 이하 청년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부의 학력이 4년제졸인 경우 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인 청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반면, 임금근로자 청년은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다.

다음으로 프로빗 분석을 수행한 <표 IV-20>을 살펴보자. 이 경우 배우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sup>12)</sup> 10번째 회귀식 ESpb\_10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변수의 경우 어떠한 경우도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전문대졸, 4년제졸, 석사 이상 모두 고졸자 대비 경제적 지원을 통계적으로 유의

12)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은 결혼을 하여 독립적인 가정을 구성할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게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 확률이 없는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은 낮아지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배우자 없음'이라는 더미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표 IV-2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배우자 여부'를 고려하고 '나이' 및 '교육수준'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졸인 경우는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아버지가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 대비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고,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 대비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다.

〈표 IV-20〉 경제적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Probit)

Variable	ESpb_1	ESpb_2	ESpb_3	ESpb_4	ESpb_5	ESpb_6	ESpb_7	ESpb_8	ESpb_9	ESpb_10
전문대졸	-0.6199***	-	-	-	-0.6216***	-0.6059***	-0.6073***	-0.1000	-0.0963	-0.0969
4년제졸	-0.3021***	-	-	-	-0.3105***	-0.3489***	-0.3492***	0.2423***	0.2080**	0.2095**
석사 이상	-0.3799***	-	-	-	-0.3921***	-0.4639***	-0.4601***	-0.1102	-0.1624	-0.1551
만나이	-0.6403***	-	-	-	-0.6326***	-0.6071***	-0.6066***	-0.3852***	-0.3640***	-0.3606***
만나이 제곱항	0.0089***	-	-	-	0.0089***	0.0086***	0.0085***	0.0053**	0.0049**	0.0049**
여성	-0.1531***	-	-	-	-0.1601***	-0.1574***	-0.1578***	-0.3400***	-0.3420***	-0.3471***
가구근로소득 22세	-	0.0109***	0.0099***	0.0098***	0.0024**	0.0015	0.0016	0.0016	0.0009	0.0010
부학력=전문대졸	-	-	-0.1604	-0.1526	-	-0.1165	-0.1116	-	-0.1192	-0.1047
부학력=4년제졸	-	-	0.2369***	0.2471***	-	0.2447***	0.2546***	-	0.1524*	0.1743**
모학력=전문대졸	-	-	0.1567	0.153	-	0.1722	0.1728	-	0.2161	0.2240
모학력=4년제졸	-	-	0.1688**	0.1609**	-	0.1022	0.1014	-	0.1043	0.1042
부-상용직근로자	-	-	-	-0.0445	-	-	-0.0545	-	-	-0.1293**
모-상용직근로자	-	-	-	0.1130**	-	-	-0.0003	-	-	0.0102
경찰: 지역업	-	-	-	-	-	-	-	0.8848***	0.8550***	0.8601***
경찰: 무급가족	-	-	-	-	-	-	-	0.7006***	0.7043***	0.6931***
경찰: 임금근로	-	-	-	-	-	-	-	-1.7428***	-1.7423***	-1.7488***
표본수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카이제곱( $\chi^2$ )	475.65	74.427	169.19	178.30	471.83	493.72	494.04	911.50	906.94	904.10

주: 1. 종속변수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설정됨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IV-21〉 경제적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2(Probit/marginal effects)

설명변수	ESpb_1	ESpb_2	ESpb_3	ESpb_4	ESpb_5	ESpb_6	ESpb_7	ESpb_8	ESpb_9	ESpb_10
전문대졸	-0.0957***	-0.0957***	-0.0957***	-	-0.0953***	-0.0926***	-0.0928***	-0.0106	-0.0103	-0.0102
4년제졸	-0.0495***	-0.0495***	-0.0495***	-	-0.0507***	-0.0555***	-0.0556***	0.0162*	0.0136	0.0137
석사 이상	-0.0583***	-0.0583***	-0.0583***	-	-0.0602***	-0.0699***	-0.0693***	-0.0114	-0.0153	-0.0147
만나이	-0.1000***	-0.1000***	-0.1000***	-	-0.0987***	-0.0940***	-0.0939***	-0.0339***	-0.0318**	-0.0315**
만나이 제공항	0.0015***	-	-	-	0.0015***	0.0014***	0.0014***	0.0005**	0.0005**	0.0005**
여성	-0.0159**	-	-	-	-0.0170**	-0.0166**	-0.0167**	-0.0128*	-0.0131*	-0.0135*
배우자 없음	0.0704***	0.1135***	0.1099***	0.1095***	0.0700***	0.0676***	0.0678***	0.0852***	0.0841***	0.0841***
가구근로소득 22세	-	0.0012***	0.0011***	0.0011***	0.0003**	0.0002	0.0002	0.0001	0.0001	0.0001
부학력=전문대졸	-	-	-0.0292	-0.028	-	-0.0178	-0.0170	-	-0.0165	-0.0150
부학력=4년제졸	-	-	0.0341***	0.0361***	-	0.0354***	0.0370***	-	0.0122	0.0143*
모학력=전문대졸	-	-	0.0251	0.0247	-	0.0256	0.0256	-	0.0215	0.0221
모학력=4년제졸	-	-	0.0253**	0.0242*	-	0.015	0.0148	-	0.0084	0.0082
부-상용직근로자	-	-	-	-0.0091	-	-	-0.0090	-	-	-0.0125**
모-상용직근로자	-	-	-	0.0143	-	-	0.0000	-	-	0.0015
경찰: 지역업	-	-	-	-	-	-	-	0.0796***	0.0771***	0.0774***
경찰: 무급가족	-	-	-	-	-	-	-	0.0605***	0.0608***	0.0597***
경찰: 임금근로	-	-	-	-	-	-	-	-0.1776***	-0.1768***	-0.1771***
표본수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카이제곱( $\chi^2$ )	487.01	254.27	289.34	291.80	483.24	496.89	496.86	910.87	909.95	910.51

주: 1. 종속변수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설정됨. 제시된 수치는 marginal effects를 의미함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2) 소득수준과 경제적 지원 수준(무배우자)

청년패널조사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응답률이 그리 높지 않아 분석표본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은 있으나, 응답자를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관련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배우자가 존재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그것이 청년 본인을 위한 지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적 지원금액에 관한 정량분석에서는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청년들을 분석표본으로 한정한다. <표 IV-22>에서는 경제적 지원금액(단위: 만원)을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수준, 만나이, 성별, 가족배경, 경제활동 상태 등을 설명변수로 한 최소자승법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정계수( $R^2$ )의 수치가 가장 높은 10번째 회귀식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의 경우 경제적 지원 여부에 관한 정량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나, 지원금액에 대한 정량분석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년제 졸업자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금액이 8만원 더 높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청년의 경우 고졸 이하 청년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금액이 26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나 성별로 인한 경제적 지원금액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배경 중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4년제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상태별로 고려했을 때,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는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하여 각각 11만원, 15만원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지원금액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적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와 '경제적 지원금액'에 대한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일 것이다. 첫째, 경제적 지원금액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표본 자체가 다르다. 둘째,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이들 중에서 경제적 지원수준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이들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생적인 ‘보고행위’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지원금액’ 관련 분석에서는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국한하였으므로,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청년을 조사한 ‘경제적 지원 여부’ 관련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선택 및 보고 편의를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V-22〉 경제적 지원금액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OLS)

설명변수	ESmpb_1	ESmpb_2	ESmpb_3	ESmpb_4	ESmpb_5	ESmpb_6	ESmpb_7	ESmpb_8	ESmpb_9	ESmpb_10
전문대졸	-3.9936	-	-	-	-3.4877	-3.1630	-2.9606	2.0509	2.3543	2.8057
4년제졸	5.0318**	-	-	-	4.6163**	4.7521**	4.7880**	8.1910***	8.5669***	8.8365***
석사 이상	28.2131*	-	-	-	27.7601*	27.6467*	27.4460*	25.8569*	26.2252*	26.1412*
만나이	-7.9603	-	-	-	-8.4548	-6.8839	-6.2551	-5.8349	-4.4619	-3.5912
만나이 제곱항	0.1297	-	-	-	0.1466	0.1183	0.1082	0.1072	0.0824	0.0684
여성	-1.2163	-	-	-	-1.2880	-1.5290	-1.4459	0.7761	0.4435	0.5959
가구근로소득 22세	-	0.0799*	0.0484	0.0398	0.0995*	0.0629	0.0587	0.0605	0.0299	0.0238
부학력=전문대졸	-	-	-3.049	-3.4066	-	-3.9422	-4.3190	-	-2.5287	-2.9759
부학력=4년제	-	-	1.098	0.8167	-	0.7385	0.4605	-	0.4449	0.0881
모학력=전문대졸	-	-	1.9807	2.2170	-	2.7445	3.0184	-	3.2576	3.6039
모학력=4년제	-	-	7.6183**	7.7727**	-	7.1977**	7.3741**	-	6.5070**	6.7229**
부-상용직근로자	-	-	-	0.8009	-	-	0.6370	-	-	0.8545
모-상용직근로자	-	-	-	3.2506	-	-	2.8978	-	-	3.5504
경찰: 자영업	-	-	-	-	-	-	-	10.8165***	10.8451***	11.1997***
경찰: 무급가족	-	-	-	-	-	-	-	15.8011***	14.9494***	15.0460***
경찰: 임금근로	-	-	-	-	-	-	-	-6.0328	-5.4232	-5.6704
표본수	529	529	529	529	529	529	529	529	529	529
결정계수( $R^2$ )	0.04	0.008	0.03	0.03	0.05	0.07	0.07	0.11	0.12	0.13

주: 1.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혹은 이혼 사례)에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임  
 2.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청년패널조사(1~11차)」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4. 소결

현금수당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는 다각적일 수 있다. 취업성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건강상태나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비경제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청년수당 지급으로 청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면, 결국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 본인들뿐만 아니라 청년을 둔 부모에게도 영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하고자 할 때, 이상적으로는 현금수당 수혜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별 미시자료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개인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족배경’ 변수가 청년과 관련된 여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가족배경’ 변수는 가구근로소득 및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가구의 근로소득이나 장단기별 자산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고, 나아가 소비지출에 쓰이는 유동자산(현금)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되는 청년패널조사에는 그러한 정보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구근로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등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현금지원’ 정책에 상응한다고 가정된 변수는 ‘가구근로소득’이다. 가구근로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통하여 현금지원이 주어지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예상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청년성과와 가구근로소득 간의 양(+)의 상관성이 크게 나타난다면, 이는 정부로부터 청년 대상으로 현금수당이 지원되었을 때 청년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적어도 존재한다는, 일종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7세 기준 취업 여부 및 27세 기준 2,500만원 이상 일자리 취업 여부에 대하여 가구근로소득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수준을 고려한 취업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부의 학력수준은 일자리 질적 수준 통제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의 학력수준은 고임금 일자리 취업 여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시점부터 최초 취업 시점까지의 간극에 대한 생존분석(Duration Analysis)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일자리를 찾을 확률을 높여 청년이 빨리 취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편의를 교정한 청년의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을 분석한 결과, 모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 시간당임금과 월임금을 높이는 것을 나타냈다. 부의 교육수준이 4년제졸인 경우 시간당임금에서는 효과가 없지만, 월임금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당임금의 분위에 따라 설명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가구의 근로소득과 부모의 학력수준이 분위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25분위, 50분위, 75분위를 고려한 결과, 75분위에서만 추정량이 95% 신뢰구간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75분위 시간당임금을 갖는 청년들의 경우에만 가구근로소득이 시간당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청년일수록 해당 청년의 성과변수가 가구소득에 더 민감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거리가 있다. 단,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여러 성과변수 중에서도 ‘시간당임금’에만 국한한 것이므로, 일자리 취득 가능성 등 다른 성과변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비경제적 분야의 청년성과로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였다. 서열이 존재하는 다유형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고 실제 정량분석 결과도 순서형 프로빗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프로빗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4년제졸인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았다. 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모가 상용직 종사자인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가족배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었다. 모가 상용직 종사자인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메카니즘은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응답과 관련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하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교육수준(전문대졸이나 4년제졸), 여성, 모의 학력(전문대졸), 가구의 근로소득 등이었다. 반면 경제활동 상태를 고려하면,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하여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할 확률을 낮지만,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하여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할 확률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고, 여성의 경우도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은 높아지고, 부의 학력이 4년제인 경우에도 해당 확률이 높아졌다.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지만,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 청년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V. 지역상품권 형태의 청년수당의 사업체 효과

---

### 1.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소개

#### 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도입배경 및 목적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당시,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여러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청년배당 정책이 논의된 바 있다. 2015년의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목적이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 및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sup>13)</sup>

#### 나. 지급 대상과 지급금액

애초의 청년배당 정책의 설계를 살펴보면, 청년배당 지급 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24세로 규정(「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2조 제1호)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나, 시범적인 적용단계임을 고려하여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정책 대상 연령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sup>14)</sup> 당시 수혜 대상은 1.1만여명 인원이었다.<sup>15)</sup> 청년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13) 성남시, 『성남시보』, 제1331호, 2015. 9. 30, <https://www.seongnam.go.kr/city/1000063/30009/bbsView.do?idx=100847>, 검색일자: 2019. 10. 2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4) 매분기의 시작달의 1일을 지급 기준일로 하고 지급 기준일에 만 24세인 청년들에게 지급되었다.

15) 2016년 상반기에는 복지부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권한쟁의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서 1분기, 2분기에는 권한쟁의심판 판결 전에는 50만원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씩 지급하고 있다. 분기별 지급기간 내 수령하지 못한 청년배당은 소급지급이 되지 않는다.<sup>16)</sup>

#### 다.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청년배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애초에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야 했다. 청년배당 정책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하여 신청 접수가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지역상품권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지급이 되었다가, 2019년 하반기 기준 성남사랑상품권, 모바일, 전자카드의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sup>17)</sup> 전자카드(성남사랑카드)는 신한카드사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되 성남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성남사랑상품권이나 모바일의 경우 성남지역 가맹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 등으로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V-1〉 성남시의 정책수당 지급방법(2019년 10월 기준)

구분	가맹점	지역	할인	사용방법	비고
지류	상품권 가맹점 (2019년 8월 기준 9,104개소)	성남시	6%	직접 지급받은 후 사용	2006년 12월 11일 최초발행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2019년 9월 기준 5,959개소)	성남시	6%	모바일 플랫폼 Chak 활용 (2019년 9월 기준 사용자는 18,772명)	2019년 2월 21일 모바일 상품권 출시
카드	신한카드사 가맹점 (2019년 8월 기준 43,000개소)	성남시	-	신한카드	- 2018년 9월 21일 카드 형 상품권으로 지급 - 2018년 176억원, 2019년 430억원 지급

자료: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16) 신청기간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분기 내 신청하면 다음 분기에 청년배당이 지급이 가능하다.

17) 모바일은 2019년에 도입되었다.

## 라. 구체적인 사용방법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지급받은 상품권을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가 아닌 모바일로 지원금을 전달받는 시스템인데, 2019년 1월 한국조폐공사와 성남시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한국조폐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 플랫폼 ‘착’(Chak)을 성남시에 적용하게 되었다.<sup>18)</sup> 19) 가맹 점포별 고유 QR코드를 발급받고 소비자를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마. 예산편성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의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안에 청년배당 정책 113억 원을 반영하였다.

## 바. 경기도 및 중앙정부과의 정책협의 등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sup>20)</sup> 이에 따라 성남시는 청년

18)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모바일로 나온다...사-한국조폐공사 협약」, 보도자료, 2019. 1. 25, <https://www.seongnam.go.kr/city/1000060/30005/bbsView.do?idx=177049>, 검색일자: 2019. 10. 2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9) 청년배당 정책 관련 모바일 사용은 2019년 5월부터 가능하다. Chak 플랫폼은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지원사업(2019년 8월 30일 시행)이나 첫출판 책드림사업(2019년 10월 시행) 등 다양한 정책수당을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업그레이드(2019. 8. 9)」, 2019. 9. 3, <https://www.seongnam.go.kr/city/1000052/30001/bbsView.do?idx=187214>, 검색일자: 2019. 10. 23.

20)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배당 정책을 시행하기 전 복지부에 대하여 관련 정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2015년 9월 25일). 당시 보건복지부는 청년배당을 ‘불수용’하면서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표인지 명확하게 선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고,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것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정책을 추진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시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법규를 입법한 후 2016년 1월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 사. 관련 법

2015년에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sup>21)</sup> 해당 조례에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다. 대상인 청년을 만 19세부터 만 24세로 규정한 것(안 제2조 제1호)을 통해, 현재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 대상을 초기에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2015년 11월 25일)하게 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 12. 11.>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1) 성남시, 『성남시보』, 제1331호, 2015. 9. 30, <https://www.seongnam.go.kr/city/1000063/30009/bbsView.do?idx=100847>, 검색일자: 2019. 10. 2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V-2〉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관련 법적 근거 및 시행 연혁

시점	주요 내용	비고
2015년 9월 30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입법 예고	
2015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청년배당에 대한 협의 요청	
2015년 9월 30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입법 예고	
2015년 11월 20일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에 청년배당 113억원을 포함함	
2015년 11월 25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 만 24세에 한해 청년배당 실시 - 예상 대상자: 1만 1,300명
2015년 12월 11일	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불수용하기로 함	
2015년 12월 18일	성남시 조례 제2955호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2016년	헌법재판소 판결 없이 청년배당정책 사업 추진 (지급 대상자: 청년 1만 8,324명) (지급된 금액: 103억원)	- 1~3분기까지는 기존 지원금의 절반만 지원 - 12월에 유보금 일괄 지급
2017년 1월~	청년배당 정책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지급 대상자: 청년 1만 603명) (지급된 금액: 105억원)	청년들은 직접 수령
2017년 4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	- 만 19~39세를 청년으로 규정 <sup>1)</sup>
2017년 10월	-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만 16~18세 청소년도 청년배당 대상에 포함) -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됨	만16세에서 만18세의 청소년도 청년배당 정책에 적용
2017년 말	중앙정부가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 개정	
2018년 1월	2017년 10월의 두 안건이 모두 부결 처리됨	
2018년 2월	-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7차례에 걸친 협의 끝 최종 동의 답변 받음(2019년 6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가능해짐) -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 수용	
2018년 5월	성남시가 권한쟁의심판청구 3건에 대한 취하	
2019년 1월	성남시와 한국조폐공사 간 '모바일 성남시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주: 1) 2017년 1월 기준 성남지역 청년인구는 30만 4,192명으로 전체 인구 97만 4,755명의 31.2%에 해당함  
 자료: 성남시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및 「성남시보」의 조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https://www.seongnam.go.kr/main.do>(검색일자: 2019. 10. 23)

## 2.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 - 사업체를 중심으로

### 가. 설문조사 설계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 목적은 지역상품권으로 도입된 성남시 청년배당의 지역 내 경제활성화 효과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2019년 9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비가맹점 대상 각각 약 400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가능한 유사한 사업체를 포착하여, 그러한 사업체를 일종의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 업종 정보를 활용하여, 가맹점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만 아직 가맹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체를 비가맹점 사업장으로 고려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공통문항, 가맹점 대상 문항, 비가맹점 대상 문항으로 구분된다. 공통문항에는 사업장의 업종, 응답자의 사업장 내 지위, 사업장의 위치와 면적, 해당 사업장 소유 여부, 주력 업종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맹점 대상 문항에는 △성남사랑상품권 인지 경로 및 시점, 가입 계기, △업종 이전 및 소재지 이전 결정과 성남사랑상품권과의 관련성, △성남사랑상품권 가입 유지 계획, △2016년 이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인한 매출 및 노동투입량의 변화, △최근 6개월 간 매출 및 노동투입량의 변화, △주요 고객층의 성별과 연령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비가맹점 대상 문항에는 △성남사랑상품권 인지 경로 및 시점, △성남사랑상품권 비가입 이유 및 신청계획, △최근 6개월 간 매출 및 노동투입량의 변화, △주요 고객층의 성별과 연령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가맹점 대상 문항의 경우, 성남사랑상품권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편의점 등도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체 대상 별도의 설문조사 문항을 설계하였다.

〈표 V-3〉 설문조사 문항 개관

구분	주요 설문문항
기본 공통문항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 면적, △사업장 공간 소유·임대 여부, △임금 근로자 규모, △사업장 개소 시점, △한달 평균 매출액 등
가맹사업장 대상	△성남사랑상품권 인지 경로 및 시점, 기입 계기, △업종 이전 및 소재지 이전 결정과 성남사랑상품권과의 관련성, △성남사랑상품권 가입 유지 계획, △2016년 이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인한 매출 및 노동투입량의 변화, △최근 6개월 간 매출 및 노동투입량의 변화, △주요 고객층의 성별과 연령대 등
비가맹사업장 대상	△성남사랑상품권 인지 경로 및 시점, △성남사랑상품권 비가입 이유 및 신청계획, △최근 6개월 간 매출 및 노동투입량의 변화, △주요 고객층의 성별과 연령대 등

자료: 저자 작성

## 나. 설문조사 기초통계량

### 1) 가응답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량

〈표 V-4〉에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업장 중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기초통계량을 비교하고 있다. 각 패널에서 숫자는 사업장 개소를 의미하며 괄호는 가맹점 혹은 비가맹점 내에서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낸다.

먼저 응답자의 사업장 내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 81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응답자의 83.25%가 사업주 본인이었고, 함께 점포를 운영하는 배우자 등이 4.31%, 관리자/팀장/매니저 등이 12.44%로 나타났다.<sup>22)</sup> 비가맹점과 가맹점을 비교하면 가맹점의 경우 사업주 응답자 비율이 비가맹점 대비 높고(가맹점: 85.12%, 비가맹점: 81.34%), 관리자/팀장/매니저 응답자 비율이 비가맹점 대비 낮다(가맹점: 10.98%, 비가맹점: 13.93%). 관리자/팀장/매니저 응답자가 비가맹점 사업장에서 높은 이유는 '기업형 슈퍼나 편의점이면서 사업장 면적이 60.5평 미만인 사업장의 일부도 비가맹점으로 포함한 것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주력 업종은 소규모 소매점(의류, 신발 등), 소규모 식품점(곡물, 육류 등),

22) 설문조사 당시, 평의원/파트타임어/배달직의 경우 설문조사를 중단하였다.

23) 기업형 슈퍼나 편의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 설문조사에서는 기업형 슈퍼나 편의점 중에서 면적이 작은 사업장은 일부 포함하였다.

음식점, 카페, 학원, 서비스업(미용, 세탁소 등), 택시/카센터/공영주차, 병원/한의원/약국/산후조리원, 시 산하기관 구내식당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성남시에서 설정한 청년배당상품권 적용 업종만을 고려한 것이다.<sup>24)</sup> 전체 표본 중에서 업종별 비중은 음식점(31.9%), 소규모 소매점(25.74%), 소규모 식품점(14.78%), 서비스업(미용, 세탁소 등)(13.18%), 학원(7.39%), 카페(4.19%) 순이다. 가맹점 집단의 경우도 이러한 업종 분포가 대체로 유사하다. 비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보다 소규모 소매점의 비중이 10.6%p 높고, 소규모 식품점은 소규모 소매점 비중은 7.1%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위치를 살펴보자. 전체 응답 사업장 중에서 전통시장 비중은 17.36%로 아파트/주택가 인근 상권(47.91%)이나 사업체/빌딩 밀집 지역 인근 상권(34.73%)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가맹사업장의 경우 전통시장 비중(25.37%)이 평균보다 8.01%p 높고, 비가맹점의 경우 전통시장 비중이(9.2%)로 평균보다 8.16%p 낮다. 비가맹점 집단의 경우는 전통시장 비중이 낮은 대신 아파트/주택가 인근 상권에 위치한 사업장의 비중(55.72%)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업체/빌딩 밀집 지역 인근 상권에 위치한 사업장의 비중(35.07%)은 가맹점 집단과 유사하다.

사업장 면적은 크게 15평 이하, 15~30평, 30~45평, 45~60평, 60~75평, 75평 이상으로 구분하였는데, 15평 이하로 응답한 사업장이 절반 이상(51.48%)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15~30평(34.61%) 해당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가맹점 집단과 비가맹점 집단 내의 사업장 면적별 분포는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사업장 공간이 자가인지 임대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96.67%가 임대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압도적인 임대 비중은 가맹점 집단과 비가맹점 집단 간 유사하게 나타난다.

24)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V-4〉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기초통계량 비교

(단위: 개소, %)

구분	가맹점 여부		전체
	비가맹점	가맹점	
〈응답자의 사업장 내 지위〉			
사업주	327 (81.34)	349 (85.12)	676 (83.25)
함께 점포를 운영	19 (4.73)	16 (3.9)	35 (4.31)
관리자/팀장/매니저	56 (13.93)	45 (10.98)	101 (12.44)
〈주력 업종〉			
소규모 소매점(의류, 신발 등)	125 (31.09)	84 (20.49)	209 (25.74)
소규모 식품점(곡물, 육류 등)	45 (11.19)	75 (18.29)	120 (14.78)
음식점	123 (30.6)	136 (33.17)	259 (31.9)
카페	15 (3.73)	19 (4.63)	34 (4.19)
학원	32 (7.96)	28 (6.83)	60 (7.39)
서비스업(미용, 세탁소)	52 (12.94)	55 (13.41)	107 (13.18)
택시/카센터/공영주차	2 (0.5)	2 (0.49)	4 (0.49)
병원/한의원/약국/산후	7 (1.74)	11 (2.68)	18 (2.22)
시 산하기관 구내식당	1 (0.25)	0 (0.00)	1 (0.12)
〈사업장의 위치〉			
전통시장	37 (9.2)	104 (25.37)	141 (17.36)
아파트/주택가 인근 상권	224 (55.72)	165 (40.24)	389 (47.91)
사업체/빌딩 밀집 지역	141 (35.07)	141 (34.39)	282 (34.73)
〈사업장 면적〉			
50㎡미만(약 15평)	220 (54.73)	198 (48.29)	418 (51.48)
50~100㎡(약 15~30평)	127 (31.59)	154 (37.56)	281 (34.61)

〈표 V-4〉의 계속

(단위: 개소, %)

구분	가맹점 여부		전체
	비가맹점	가맹점	
100~150㎡(약 30~45평)	39 (9.70)	38 (9.27)	77 (9.48)
150~200㎡(약 45~60평)	14 (3.48)	12 (2.93)	26 (3.2)
200~250㎡(약 60~75평)	1 (0.25)	5 (1.22)	6 (0.74)
250㎡ 이상(약 75평 이상)	1 (0.25)	3 (0.73)	4 (0.49)
〈사업장 공간 사용 여부〉			
소유	11 (2.74)	16 (3.9)	27 (3.33)
임대	391 (97.26)	394 (96.1)	785 (96.67)
Total	402 (100)	410 (100)	812 (1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가맹사업체 설문조사 기초통계량

가맹사업체 설문조사 관련 기초통계량을 소개한다. 먼저, 〈표 V-5〉에서는 가맹시점에 따라 가맹사업체를 구분하고, 각 세부집단별 성남사랑상품권 인지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맹시점별 사업장 조사수를 살펴보면, 2019년 가맹사업장이 138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18년(88개소), 2015년 이전(73개소), 2017년(65개소), 2016년(46개소) 순이었다.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지경로는 뉴스등 언론보도, 성남시청 공무원의 방문 혹은 홍보, 가족, 친구 등 지인, 동종업계 사업 종사자, 인근 지역 타 업종 종사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sup>25)</sup> 성남시청 방문 혹은 홍보로 인하여 성남사랑상품권을 인정한 가맹사업체의 비중(34.63%)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동종 업계 (23.9%), 인근 지역 타업종 종사자(20.0%)로부터 상품권에 정보를 입수한

25) '기타'에는 손님이 직접 알려줘서 인지하였다는 대답이 많았음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친구 등 지인을 통한 인지경로 및 뉴스등 언론보도를 통한 인지경로는 모두 9.02%로 나타났다.

성남시청 방문차 혹은 홍보로 인하여 청년사랑상품권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 비중은 2015년 이전 가입사업장(27.4%)보다 2016년 가입사업장(32.61%)이 더 높다. 2017년에는 그 비중이 다소 감소(29.23%)했다가, 이후 2018년에 크게 증가(38.64%)하였다. 2019년은 수치로서는 가장 높았으나(39.13%), 2018년 대비해서는 0.49%p만 증가한 셈이다.

성남시청을 통한 성남사랑상품권을 인지한 사업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15년 이전 가맹사업장과 2017년 가맹사업장의 경우 대신 동종 업계 사업 종사자로부터의 인지한 경우의 비중이 다른 연도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각각 35.62%, 29.23%).

〈표 V-5〉 (가맹점 대상) 성남사랑상품권 인지경로 및 가맹시점

(단위: 개소, %)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뉴스등 언론 보도	3 (4.11)	2 (4.35)	6 (9.23)	9 (10.23)	17 (12.32)	37 (9.02)
성남시청 방문차 혹은 홍보	20 (27.4)	15 (32.61)	19 (29.23)	34 (38.64)	54 (39.13)	142 (34.63)
가족, 친구	7 (9.59)	6 (13.04)	5 (7.69)	9 (10.23)	10 (7.25)	37 (9.02)
동종업계 사업 종사자	26 (35.62)	10 (21.74)	19 (29.23)	17 (19.32)	26 (18.84)	98 (23.9)
인근 지역 타업종 종사	13 (17.81)	11 (23.91)	12 (18.46)	18 (20.45)	28 (20.29)	82 (20.0)
기타	4 (5.48)	2 (4.35)	4 (6.15)	1 (1.14)	3 (2.17)	14 (3.41)
합계	73 (100)	46 (100)	65 (100)	88 (100)	138 (100)	410 (1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는 〈표 V-6〉에서 가맹 사업장으로 등록된 계기와 향후 가맹 사업장 유지 계획을 고려하였다. 먼저 가맹점 가입 계기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가입’,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권유로 인해 가입’, ‘상인회나 주변 상인들의 권유로 인해 가입’, ‘고객들의 문의 및 가맹요청 때문에 가입’,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권유로 인해 가입했다는 응답이 전체 가맹사업장의 거의 절반(46.1%)에 해당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상인회나 주변 상인들의 권유로 인해 가입했다(39.76%)는 응답이 많았다.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가입했다는 경우(6.34%)는 고객들의 문의나 요청 때문에 가입했다는 응답보다(6.83%)도 다소 낮게 나타났다. 향후 가맹유지 계획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410개소 중에서 407개소(99.2%)가 유지를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유지하지 않겠다고는 극소수의 사업장은 주위의 권유(공무원 혹은 주변 상인)에 의해 가맹점 등록을 한 사업장이었다.

〈표 V-6〉 (가맹점 대상) 가맹점 가입 계기 및 향후 가맹유지 계획

(단위: 개소, %)

구분		향후 가맹유지 계획		전체
		유지 안함	유지함	
가맹점 가입계기	자발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가입	0 (0.00)	26 (6.39)	26 (6.34)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권유로 인해	1 (33.33)	188 (46.19)	189 (46.1)
	상인회나 주변 상인들의 권유로 인해	2 (66.67)	161 (39.56)	163 (39.76)
	고객들의 문의 및 가맹 요청 때문에	0 (0.00)	28 (6.88)	28 (6.83)
	기타	0 (0.00)	4 (0.98)	4 (0.98)
전체		3 (100)	407 (100)	410 (1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7〉에서는 2016년 청년배당정책 도입 이후의 가맹점의 매출 및 노동투입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당시 성남사랑상품권에 가입했던 사업장과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매출이나 노동투입량이 청년배당 정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간접효과(외부효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V-7〉 (가맹점 대상) 2016년 청년배당 정책 도입 이후 매출 및 노동투입량의 변화

(단위: 개소, %)

구분		2016년 청년배당 정책 도입 이후 노동투입량 상의 변화			전체
		증대	변화 없음	축소	
2016년 청년배당 정책 도입 이후 매출의 변화	증가	15 (28.3) (75.0)	38 (71.7) (9.95)	0 (0.0) (0.0)	53 (100) (12.93)
	변화 없음	5 (1.43) (25.0)	339 (97.13) (88.74)	5 (1.43) (62.5)	349 (100) (85.12)
	감소	0 (0.0) (0.0)	5 (62.5) (1.31)	3 (37.5) (37.5)	8 (100) (1.95)
전체		20 (4.88) (100)	382 (93.17) (100)	8 (1.95) (100)	410 (100) (1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먼저 2016년 청년배당정책 도입 이후 매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85.12%로 가장 높았고,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12.93%, 감소했다는 응답이 1.95%로 나타났다. 반면 2016년 청년배당 정책 도입 이후 노동투입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93.1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동투입량을 늘렸다는 의견이 4.88%, 축소했다는 의견이 1.95%에 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투입량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97.13%였고, 노동투입량을 증대했거나 축소했다는 응답은 1.4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8개소 중에서는 노동투입량이 늘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고, 5개소에서 노동투입량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3개소에서 이전보다 노동투

입량을 축소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2016년 청년배당 정책 배당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53개소 사업장 중에서 노동투입량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는 응답은 71.7%에 해당하였고, 증대했다는 응답은 28.3%에 달하였다. 이상의 응답에서 매출의 변화가 노동투입량의 변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매출 변화분(14.88%)과 노동투입량의 변화분(6.83%)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매출에 대한 노동투입량의 탄력성이 낮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동투입량을 변화한 사업장의 비중(6.83%)을 매출이 변화한 사업장의 비중(14.88%)으로 나누면, 매출 변화에 대한 노동투입량 탄력성을 ‘사업장 비중’ 측면에서 구할 수 있다. 이 값이 0.46으로 0.50보다 낮다는 것은, 만약 전체 100개 사업장 중에서 6개 사업장에서 매출이 변화될 때, 3개의 사업장에서만 노동투입량이 변화될 것임을 의미한다.<sup>26)</sup> 본 설문조사에서 정의된 ‘노동투입량’에는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경우도 포함되는 만큼 매출 변화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46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V-8〉에서는 향후 (조사시점인 2019년 9월 이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 전망과 지역상품권 정책 영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410개소의 가맹점 사업장 중에서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이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25개소로 전체의 79%였으며, 긍정적으로 응답(‘다소 증가’)한 경우는 9.02%(37개소),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다소 감소’, ‘크게 감소’)는 11.7%(48개소)로 나타났다.

향후 매출에 지역상품권 정책이나 가맹점수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가맹사업장 중의 22.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60%,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4.1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3.17%에 해당하였다.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 전망별로 지역상품권 정책·가맹점수에 대한 영향에 대한 가맹점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일 년간 사

26) 본고에서 사용하는 ‘탄력성’ 정의는 저자가 자의적으로 명명한 것이며, 노동경제학에서 보통 의미하는 평균적인 사업장 기준의 통상적인 탄력성 개념과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장 매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업장 중에서 70.27%가 향후 본 사업장의 매출에 지역상품권 정책 및 가맹점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사업장에서 성남시의 지역상품권 정책방향이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음을 내포한다. 반면에,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20.31%에 해당하는 66개소 가맹사업장이 지역상품권의 정책 및 가맹점수가 향후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48개소 가맹사업장에서는 지역상품권 정책이나 가맹점수가 본 사업장의 향후 매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대체로 판단(95.8%)하고 있다.

〈표 V-8〉 (가맹점 대상)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 전망과 지역상품권 정책 영향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 전망				전체
		다소 증가	변화 없음	다소 감소	크게 감소	
향후 매출 규모 변화에 따라 지역상품권 정책이나 가맹점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그렇다	26 (70.27)	66 (20.31)	1 (2.27)	0 (0)	93 (22.68)
	그렇지 않다	9 (24.32)	208 (64)	28 (63.64)	1 (25)	246 (6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1 (12.62)	14 (31.82)	3 (75)	58 (14.15)
	잘 모르겠다	2 (5.41)	10 (3.08)	1 (2.27)	0 (0)	13 (3.17)
전체		37 (100)	325 (100)	44 (100)	4 (100)	410 (1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9〉는 〈표 V-8〉과 유사하되,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 대신 사업장 노동투입량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노동투입량에 대해서는 92.68%의 가맹사업장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9개소, 다소 감소하거나 크

게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11개소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좀 더 우세하였다.

〈표 V-9〉 (가맹점 대상)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노동력 투입 전망과 지역상품권 정책 영향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노동투입량 전망				전체
		다소 증가	변화 없음	다소 감소	크게 감소	
향후 매출 규모 변화에 따라 지역상품권 정책이나 가맹점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그렇다	14 (73.68)	55 (14.47)	0 (0)	0 (0)	69 (16.83)
	그렇지 않다	5 (26.32)	262 (68.95)	6 (60)	0 (0)	273 (66.59)
	전혀 그렇지 않다	0 (0)	51 (13.42)	3 (30)	1 (100)	55 (13.41)
	잘 모르겠다	0 (0)	12 (3.16)	1 (10)	0 (0)	13 (3.17)
전체		19 (100)	380 (100)	10 (100)	1 (100)	410 (10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향후 일 년간 노동투입량에 대하여 지역상품권의 정책 및 가맹점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 가맹사업장의 16.83%,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가맹사업장의 80%에 달했다. 정책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일 년간 노동투입량 전망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일 년간 노동투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맹사업장의 73.68%가 정책 영향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향후 일 년간 매출’과 관련된 기초통계량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노동투입량을 늘리려는 사업장은 지역상품권 정책 및 가맹점수가 해당 사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노동투입량’도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노동투입량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장 중에서도 14.47%에 해당하는 55개소 사업장이 노동투입량에 있어서 지역상품권 및 가맹점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노동투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장에서는 정책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V-10〉 (비가맹사업장) 성남사랑상품권 인지도시점 및 인지경로

(단위: 개소, %)

구분		성남사랑상품권 인지 경로						전체
		뉴스 등 언론 보도	성남시청 방문차 혹은 우편 광고물 등	가족, 친구	동종 업계 사업 종사자	인근 지역 타업종 종사자	기타	
성남사랑상품권 인지도시점	2015년 이전	9 (10.98)	10 (12.2)	12 (14.63)	19 (23.17)	24 (29.27)	8 (9.76)	82 (100)
	2016년	5 (11.36)	5 (11.36)	3 (6.82)	12 (27.27)	19 (43.18)	0 (0.0)	44 (100)
성남사랑상품권 인지도시점	2017년	10 (13.7)	18 (24.66)	8 (10.96)	12 (16.44)	23 (31.51)	2 (2.74)	73 (100)
	2018년	12 (16.67)	20 (27.78)	7 (9.72)	11 (15.28)	22 (30.56)	0 (0.0)	72 (100)
	2019년	3 (5.56)	7 (12.96)	5 (9.26)	15 (27.78)	23 (42.59)	1 (1.85)	54 (100)
전체		39 (12.0)	60 (18.46)	35 (10.77)	69 (21.23)	111 (34.15)	11 (3.38)	325 (100)

주: 1. 비가맹점 중에서 과거 가맹점 경험이 없으며 성남지역상품권 가맹 가입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325개소 사업장만 고려함

2. ( ) 안은 비중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비가맹사업체 설문조사 기초통계량

비가맹사업체의 경우, 과거 과맹점 경험이 없지만 가맹 자격조건은 부합하는 비가맹 사업장 325개소 중심으로 기초통계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V-10〉에는 비가맹 사업장의 성남사랑상품권 인지도시점 및 인지경로를 보여 주고 있다. 인근 지역 타업종 종사자(34.15%)로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동종업계 사업 종사자(21.23%),

성남시청 방문차 혹은 우편광고물 등(18.46%), 뉴스 등 언론보도(12.0%), 가족 및 친구(10.77%) 순이었다. 과거 성남사랑상품권 가맹 경험이 없고,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장이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적어도 인지는 하고 있었다.

성남사랑상품권 인지도별로 구분하면 2015년 이전에 인지했다는 대답이 25.23%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는 2017년(22.46%), 2018년(22.15%)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지 시점별로 인지경로를 파악해보면, 먼저 동종업계나 인근지역 타 업종 종사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은 비율은 2015년 이전 52.44%, 2016년 70.45%, 2017년 47.85%, 2018년 45.84%, 2019년 70.37%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성남시청 방문차 혹은 우편광고물을 통해 해당 정보를 인지한 경우는 2015년 이전 12.2%, 2016년 11.36%, 2017년 24.66%, 2018년 27.78%, 2019년 12.96%로 2017~2018년에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 전망 및 정책 영향에 대해서는 <표 V-10>에서 제시하고 있다. 향후 사업장 매출에 대하여는 76%에 해당하는 247개소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5.23%에 불과한 반면 '다소 감소' 혹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8.7%에 달하였다. 이러한 매출 전망에 대하여 지역상품권 및 가맹점수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12.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84.31%가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맹점 설문조사에서는 사업장 매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업장일수록 정책 영향이 존재한다고 대답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비가맹점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가맹 사업장의 47.06%가 지역상품권 정책 및 가맹점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sup>27)</sup> 반면,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이 '다소 감소' 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가맹 사업장의 90.57%가 지역상품권 정책 및 가맹점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7) 가맹점 설문조사의 경우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업장의 70.27%가 정책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V-11> 참고).

〈표 V-12〉에서는 〈표 V-11〉과 유사하되 비가맹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일 년간 사업장의 노동투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는 325개소 중 10개소로 3.07%에 지나지 않았다.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2.3%, '다소 감소' 혹은 '크게 감소'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개소로 4.61%로 나타났다. 정책 영향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0.78%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84.6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향후 일 년간 사업장의 노동투입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업장의 60%가 정책 영향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노동투입량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업장의 83.34%가 정책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V-11〉 (비가맹점 대상)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 전망과 지역상품권 정책 영향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매출 전망				전체
		다소 증가	변화 없음	다소 감소	크게 감소	
향후 매출 규모 변화에 따라 지역상품권 정책이나 가맹점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그렇다	8 (47.06)	29 (11.74)	3 (5.66)	0 (0.00)	40 (12.31)
	그렇지 않다	8 (47.06)	176 (71.26)	25 (47.17)	1 (12.5)	210 (64.62)
	전혀 그렇지 않다	1 (5.88)	35 (14.17)	23 (43.4)	5 (62.5)	64 (19.69)
	잘 모르겠다	0 (0)	7 (2.83)	2 (3.77)	2 (25.0)	11 (3.38)
전체		17 (100)	247 (100)	53 (100)	8 (100)	325 (1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2〉 (비가맹점 대상)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노동력 투입 전망과  
지역상품권 정책 영향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향후 일 년간 사업장 노동투입량 전망				전체
		다소 증가	변화 없음	다소 감소	크게 감소	
향후 매출 규모 변화에 따라 지역상품권 정책이나 가맹점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매우 그렇다	1 (10.0)	0 (0.0)	0 (0.0)	0 (0.0)	0 (0.31)
	그렇다	5 (50.0)	27 (9.0)	2 (16.67)	0 (0.0)	34 (10.46)
	그렇지 않다	4 (40.0)	218 (72.67)	5 (41.67)	0 (0.0)	227 (69.85)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43 (14.33)	5 (41.67)	0 (0.0)	48 (14.77)
	잘 모르겠다	0 (0.0)	12 (4.00)	0 (0.0)	3 (100)	15 (4.62)
전체		10 (100)	300 (100)	12 (100)	3 (100)	325 (100)

주: ( ) 안은 비중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설문조사 결과: 정량분석

성남시의 청년수당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만큼,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의 어떠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sup>28)</sup> 표본의 규모가 한정적이고, 횡단면 조사이며, 과거 매출, 영업이익,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경험적 사실에 대한 설문문항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본 정량분석의 결과가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되는 것으로 인한 성과변수에 대한 인과적 영향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정량분석의 결과를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서술상의 편의를 위하여

28) 응답자는 사업주이거나, 함께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배우자 등, 관리자/팀장/매니저 중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응답자의 유형별로 응답 경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정량분석에서 심층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효과’ 혹은 ‘영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1) 정량분석 방법 개관

정량분석 모형으로 프로빗 모형을 고려한다. 프로빗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확률을 극대화하여 파라미터를 구하는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 추정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관찰된 데이터와 관련한 확률함수를 계산할 때 표준정규분포 함수를 활용하는 것이 프로빗 모형이기 때문이다.

프로빗 모형에서는 조건부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된다.

$$p_j = \Pr[y_j = 1 | d_j, X_j] = \Phi(\beta_0 + \beta_1 d_j + X_j' \beta)$$

이때  $\Phi(\cdot)$ 은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내며, 여기에서  $p_j$ 는 사업장  $j$ 가 향후 매출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할 확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이 속한 업종이나 지역 및 사업장의 기본 특질을 통제한 후,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여부가 이러한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 데이터가 군집화되어 있는 경우, 표준적인 프로빗 모형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경우, 표준오차상의 오류가 발생한다.<sup>29)</sup> 관측치가 군집 내의 상관성을 지니는 경우, 상대적으로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정보는 비군집화된 데이터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제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의 표본이 성남시 내의 지역단위별로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에 되어 있는 만큼 군집화로 인한 오차를 고려해야 한다. Angrist and Pischke(2008)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군집화를 반영하게 되면 추정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전체 표본이 동일하고, 각 군집수가 적으면 이는 곧 해당 표본 내에서 서로 독립적인 관측치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의 표본분산의 값이 표준적인 환경

29) 군집화로 인한 표본오차 교정 문제는 횡단면 데이터에서 집단별로 개별 데이터가 추출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데이터를 횡단면 데이터로 활용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개별 단위별로 군집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에서의 표본분산에 비해 더 커진다. 그러므로 군집화된 표본을 사용하는 경우 표본오차를 교정해야 한다. 이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강건한 공분산 행렬을 일반화하여 이분산성 또는 군집화를 허용하거나, 모수적 접근법을 직접 이용하거나, 개별 관측치가 아닌 군집 자체를 재추출하는 블록 부트스트랩(block bootstrap)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sup>30)</sup> 본고에서는 집단 내 관측치 간의 상관성을 허용하는 공분산 행렬을 일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오차 값을 조정하였다.<sup>31)</sup>

군집화로 인한 표본오차 값을 조정할 때 군집화는 성남시의 하위 ‘행정동’ 단위(분당구 18동, 수정구 17동, 중원구 11동)를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정량 분석 추정식에서 이러한 군집화의 기준이 되는 군집 고정효과(cluster-specific fixed effects)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time-invariant) 군집별 고정효과가 다른 통제변수와 상관성이 존재할 경우, OLS(ordinary least squares)와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량은 불일치(inconsistent)한 반면, 군집별 고정효과 모형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이다(Cameron and Miller, 2015). 이러한 이유로 본 정량분석에서 ‘행정동’ 단위의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행정동 터미변수를 추정식에 모두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표본수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3구에 대한 터미변수만 삽입하였다.<sup>32)</sup>

## 2) 향후 매출 예상에 대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효과(〈표 V-13〉 참조)

현재 사업장의 일정한 상태변수를 통제하여 사업장의 기본적인 성격이 동

30) Angrist and Pischke(2008)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 구한 표본오차가 통상적인 표준 오차의 약 3배로 나타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31) 군집화를 고려한 표본오차에 대해서는 Cameron and Miller(2015)를 참고할 수 있다. Cameron, A. C. and Miller, D. L., “A practitioner’s guide to cluster-robust infer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50(2), 2015, pp. 317~372.

32) 3구의 하위 행정동 단위의 시간 불변의 고정효과가 존재할 경우, 본고에서 제시한 추정량은 불일치 추정량이 될 수 있다.

일하게 만들었을 때, 준실험적으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되었을 때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변수로서 ‘향후 긍정적 매출 예상’ 여부를 활용하고자 한다. 즉, 향후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 있어서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더미변수로, 향후 사업장의 매출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매우 증대’, ‘다소 증대’라고 응답한 경우 1, ‘변화 없음’을 포함하여 ‘다소 감소’, ‘매우 감소’라고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  $y_j$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y_j = \begin{cases} 1 & \text{if 향후 매출에 대한 긍정적 기대} \\ 0 & \text{if 향후 매출에 대한 비긍정적 기대} \end{cases}$$

정책변수  $d_j$ 로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가맹점인 경우 1, 비가맹점인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d_j = \begin{cases} 1 & \text{if 가맹점인 경우} \\ 0 & \text{if 비가맹점인 경우} \end{cases}$$

기타 설명변수  $x_j$ 로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 소속 시군구, 업력, 사업장 규모, 총고용임금근로자, 사업장 공간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한다. 향후 매출의 증가 여부는 업종별 시장상황, 지역의 경제상황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업종변수와 사업장 소속 시군구가 설명변수  $x_j$ 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업력변수는 현 사업장에서의 개소 시점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한 값이다.<sup>33)</sup> 사업장의 업력을 포함한 것은 본 설문조사에서 고려하는 사업장이 영세자영업자인 만큼 업력이 늘어날수록 폐업 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33) 현 사업장과 관련된 업종 혹은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장의 인적 자본을 함께 고려하고자 할 때는 업력을 정의할 때 이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출에 대해서 신규 진입 사업장의 경우 더욱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도 업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매출이 외부적인 시장상황에 의해서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의 특질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만큼, 사업장 규모, 총고용임근로자, 사업장 공간 소유 여부 등의 변수도  $X_j$ 에 포함할 수 있다.

정량분석의 결과가 <표 V-13>에 제시되어 있다. 총 7가지 유형의 회귀식을 고려하였는데, 관심 변수는 가맹점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이다. 가맹점 더미변수는 회귀식 p1, p4, p5, p6, p7에서 향후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할 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1의 경우는 설명변수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업종이 추가되고 근로자수가 추가로 통제되지 않은 회귀식 p2, p3의 경우 가맹점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자수’가 추가로 통제되었을 때 가맹점 더미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띠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 가지 가능한 해석으로는 근로자수가 사업장의 ‘규모’를 적절히 포착하는 등, 사업장의 특질을 균등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원래 향후 매출에 대한 의견이 가맹점 여부에 따라 달랐고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근로자 규모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아 그러한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자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한 것은 진실험적인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당 결과를 해석해보면, 임금근로자수가 회귀식의 오차항과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귀식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가능하다. 만약 어떠한 사업장이 미래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고려하여 최근에 임금근로자수를 ‘이미’ 조정하였고 그러한 조정된 근로자수가 본원의 설문조사에 포함된 ‘근로자수’ 변수라면 심각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떠한 해석이 유의미한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변수에 포함된 변수를 고려하자. 모든 경우에 업력이 포함

되어 있는데, 업력이 증가하는 경우, 응답자가 향후 매출에 긍정적으로 답변할 확률이 커지지만, 업력의 제곱항에 대해서는 계수값이 정(+의) 값을 갖기 때문에 업력이 증가할수록 ‘향후 매출을 긍정적이지 않게 예상할 확률’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 분야도 ‘향후 매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할 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택시/주차장 혹은 공공기관 산하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경우를 준거집단(base group)으로 두었기 때문에, 〈표 V-14〉에서 보이는 계수는 이러한 준거집단에 대비한 결과로 이해하여야 한다. 두 번째 회귀식(p2)을 고려하면, 준거집단에 속하는 업종에 대비하여 향후 매출 예상이 긍정적일 확률이 높은 업종은 카페 > 병원, 산후조리원 등 > 소규모 식품점 > 소규모 소매점 순이다. 카페나 병원, 산후조리원 등의 업종 분야가 향후 매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은 다른 회귀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세번째 회귀식(p3)과 다섯째 회귀식(p5) 이후부터는 사업장 면적도 고려하였다. 준거집단은 15평 이하인데, 이러한 면적은 설명변수가 거의 제시되지 않은 세 번째 회귀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명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그러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장의 면적 자체가 매출 예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sup>34)</sup>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임금근로자수를, 사업장 소유 여부, 소재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하였다. 임금근로자수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한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이때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된다. 근로자수는 회귀식 p4, p5에서 향후 매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할 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회귀식 p6, p7에서는 그러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 이는 근로자수와 관련된 계수값이 회귀식 차수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종속변수에 대한 ‘근로자수’의 설명력

34) 한편 사업장의 사업이 속하는 업종 분야에 일단 정해지면 그 면적 분포가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효과가 업종효과에 흡수된 것일 수도 있다.

이 임대 여부, 소재지, 사업장 위치 등의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매출 예상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정량분석에서 본고는 매출수준을 설명변수 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시계열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요컨대, 현재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요인과 향후 매출에도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요인 간의 상관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계열 상관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GMM(General Method of Moment) 추정량을 활용할 수 있지만, 도구변수로 활용할 만한 변수가 설문조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3) 향후 노동투입량 예상에 대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효과(〈표 V-14〉 참조)

다음으로 종속변수를 향후 매출에 대신, 향후 노동투입량에 대한 사업장의 예상이 긍정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자본이나 노동 측면에서 추가적인 투입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이 적용 가능한 사업장이 소규모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고려할 때, 향후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 투입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정량분석 결과가 제시된 〈표 V-14〉도 위와 같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회귀식 p1~p5 모두 가맹점 더미변수가 ‘향후 노동투입량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할 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설명변수로는 업력, 업종 분야, 사업장 면적, 사업장 임대 여부, 소재지, 사업장 위치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수’는 ‘향후 노동투입량’과 관련된 종속변수와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

기타 설명변수의 계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업종별 고정효과는 향후 매출 관련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카페' 업종은 향후 매출 관련 분석에서도 준거집단 대비 종속변수에 대한 정(+)의 효과가 제일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노동투입량 관련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 임대 여부나 소재지는 향후 매출에서와 같이 향후 노동투입 예상 관련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단, 사업장의 '위치'변수는 향후 매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향후 노동투입량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준거집단인 전통시장 대비 '아파트, 주택가 인근 상권' 관련 계수는 0.762, '사업체, 빌딩 밀집지역 인근 상권'의 관련 계수가 1.14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보다 도심지역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향후 노동투입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투입은 사업주 자신의 근로시간 증대일 수도 있고, 임금근로자의 고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투입'을 증대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V-13〉 향후 긍정적인 매출 예상과 가맹점 여부와의 관계 - Probit(시군구 레벨 클러스터)

변수 설명		p1	p2	p3	p4	p5	p6	p7
가맹점 더미변수		0.291*	0.27	0.261	0.320*	0.309*	0.331*	0.369**
업력	업력	-0.175**	-0.175**	-0.176**	-0.188**	-0.189***	-0.203***	-0.211***
	업력 제공항	0.015**	0.015**	0.015**	0.016**	0.016**	0.017***	0.018***
업종 (base=택시, 산하기관 구내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의류, 신발 등)	-	3.823***	4.002***	3.803***	3.830***	3.972***	3.954***
	소규모 식품점(곡물, 육류 등)	-	3.978***	4.193***	3.962***	4.007***	4.154***	4.174***
	음식점	-	3.804***	3.951***	3.728***	3.742***	3.846***	3.828***
	카페	-	4.359***	4.577***	4.360***	4.404***	4.539***	4.525***
	학원	-	3.814***	3.880***	3.719***	3.689***	3.795***	3.773***
	서비스업(미용실, 세탁소 등)	-	3.368***	3.587***	3.373***	3.415***	3.524***	3.521***
	병원, 산후조리원 등	-	4.333***	4.491***	4.310***	4.308***	4.399***	4.356***
사업장 면적 (base=15평 이하)	15~30평	-	-	0.282*	-	0.209	0.232	0.203
	30~45평	-	-	0.368	-	0.213	0.221	0.215
	45평 이상	-	-	0.311	-	0.079	0.114	0.131
임금근로자수	근로자	-	-	-	0.115***	0.099**	0.093	0.086
사업장 소유 여부	임대	-	-	-	-	-	0.35	0.307
소재지 (base=중원구)	분당구	-	-	-	-	-	0.313	0.309
	수정구	-	-	-	-	-	0.316	0.302
사업장 구분 (base=전통시장)	아파트, 주택가 인근 상권	-	-	-	-	-	-	0.298
	사업체 빌딩 밀집지역 인근 상권	-	-	-	-	-	-	0.361
상수항		-1.304***	-5.123***	-5.439***	-5.219***	-5.318***	-6.013***	-6.219***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4〉 향후 긍정적인 노동투입 예상과 가맹점 여부와의 관계 - Probit(시군구 레벨 클러스터)

변수 설명		p1	p2	p3	p4	p5
가맹점 더미변수		0.023	0.041	0.032	0.032	0.105
업력	업력	-0.117	-0.126	-0.132*	-0.142*	-0.144*
	업력 제공항	0.009	0.01	0.011	0.011	0.012
업종 (base=택시, 산하기관 구내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의류, 신발 등)	-	3.881***	3.481***	3.844***	3.934***
	소규모 식품점(곡물, 육류 등)	-	3.373***	2.967***	3.316***	3.423***
	음식점	-	3.880***	3.481***	3.809***	3.912***
	카페	-	4.166***	3.803***	4.185***	4.344***
	학원	-	3.662***	3.251***	3.564***	3.749***
	서비스업(미용실, 세탁소 등)	-	3.833***	3.415***	3.752***	3.875***
	병원, 산후조리원 등	-	3.936***	3.543***	3.845***	3.910***
사업장 면적 (base=15평 이하)	15~30평	-	-	0.024	0.03	-0.085
	30~45평	-	-	-0.319	-0.281	-0.413
	45평 이상	-	-	0.369	0.399	0.224
사업장 소유 여부	임대	-	-	-	0.001	-0.022
소재지(base=중원구)	분당구	-	-	-	0.342	0.235
	수정구	-	-	-	0.11	-0.044
사업장 구분 (base=전통시장)	아파트, 주택가 인근 상권	-	-	-	-	0.762**
	사업체 빌딩 밀집지역 인근 상권	-	-	-	-	1.149***
상수항		-1.457***	-5.275***	-4.860***	-5.395***	-6.239***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4) 향후 긍정적인 매출예상과 가맹점 여부 및 정책 영향 의견과의 관계 (〈표 V-15〉 참조)

다음으로는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정책 변수와 향후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맹점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와 ‘향후 매출에 대한 평가가 성남사랑상품권이 영향을 끼친 정도’ 간의 교차항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편의를 위하여 후자를 정책 영향 의견이라고 지칭하도록 하자. 정책 영향 의견과 관련된 더미변수는 ‘향후 매출’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에 그러한 응답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sup>35)</sup>

정책 영향 의견과 가맹점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을 정책변수로 추가 고려한 것은 설문조사 문항에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질의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정량분석에서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정책 영향에 대한 의견이 강한 사업장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영향을 받은 ‘처리집단’을 보다 잘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책 영향 의견’이 ‘향후 매출’에 대한 예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V-15〉의 결과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보다는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런 점에서 〈표 V-15〉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맹점 더미변수와 정책 영향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이 향후 매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확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가맹점 더미변수 자체가 갖는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진다는 것은, 성남시사랑상품권 가맹 사업장 중에서도 성남시사랑상품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장에서 긍정적인 향후 매출 예상이 나타날 확률이 있음을 내포한다.

#### 5) 향후 긍정적인 매출예상과 가맹시점과의 관계(〈표 V-16〉, 〈표 V-17〉 참조)

다음으로 가맹점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보다 가맹 시점별 더미변수를 포함

35) 향후 매출에 대한 해당 정책의 영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경우 0의 값을 가진

하여 성남시사랑상품권의 효과와 더불어 2016년부터 도입된 청년배당의 정책효과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이 가맹점이 되는 시점부터 성남시 사랑상품권 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맹시점 더미변수는 정책효과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표 V-16〉과 〈표 V-17〉에서는 관련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 V-16〉은 사업장의 개소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을 표본에 포함하였고, 〈표 V-17〉의 경우 2015년 이전에 개소된 사업장들만 표본에 포함하였다. 2016년에 도입된 청년배당의 정책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 V-17〉과 관련된 정량분석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표 V-16〉에서 가맹시점과 관련된 변수의 계수를 보면 2019년 가맹시점 더미변수는 모든 회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가맹시점 더미변수는 회귀식 p4~p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가맹시점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가맹시점 더미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띠는 것은 근로자수, 사업장 면적 등 다른 변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되면서 2018년 가맹시점 단독의 효과가 잘 포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회귀식 p1~p3에서 2018년 더미변수의 계수는 0.348~0.368에 그치는 데 비해, 추가적인 변수가 삽입된 회귀식 p4~p6에서는 계수가 0.395~0.418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9년 가맹시점 더미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은 2019년에 성남시 자체의 적극적인 가맹점 확보 노력으로 가맹점수가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직원의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설명을 습득하고 향후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맹시점이 2019년인 만큼 가맹 초기단계에서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사업장의 매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설명변수와 관련된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자. 업력과 관련된 설명변수의 경우 부호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가맹시점’을 정책변수로 사용한 회귀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업종 분야를 나타내는 설명변수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 카페나 병원, 산후조리원 등이 준거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향후 매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할 확률'이 높다는 점 등도 <표 V-16>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 면적이나 임대 여부의 경우 <표 V-16>에서도 앞서 살펴보았던 '향후 매출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관련된 정량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근로자수의 경우도 사업장 면적이나 임대 여부와 관련된 설명변수와 함께 설명변수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의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점 등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다.

<표 V-16>에서는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을 분석 대상 표본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통제집단인 비가맹점 사업장 간의 이질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처리집단의 경우 가맹시점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소시점과 가맹시점이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가맹시점별로 처리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업력별로 처리집단을 구분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개소시점이 정의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경우 설문조사 당시 가맹점만이 아닌 모든 사업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통제집단에는 업력 측면의 이질성이 무척 클 수 있다. 요컨대,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간의 유사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것이다.<sup>36)</sup>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간 유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 V-17>에서는 2015년 이전 개소 사업장만 표본에 포함하였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2015년 이전에 개소를 하고, 2015년 이전에 성남사랑상품권의 가맹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소시점과 가맹시점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2016년 이후에 성남사랑상품권에 가맹한 경우에는 개소시점과 가맹시점이 분리될 수 있다.

<표 V-17>에서의 가맹시점 더미변수와 관련된 계수의 값은 <표 V-16>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청년배당 정책이 시행된 2016년에 가맹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경우 회귀식 p2~p6에서 준거집단인 비가맹 사업장에 비하여

36) 업력을 회귀식의 통제변수에 삽입하여 업력의 효과, 즉 개소시점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에 속하는 사업체들 간 업력분포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간 유사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향후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도 가맹시점 터미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도 가맹시점 터미변수의 계수는 회귀식 p1~p3에 비하여 회귀식 p4~p6의 경우 그 절댓값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표 V-16>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적어도 회귀식 p4~p6에 대해서 <표 V-16>에서도 2018년 가맹시점 터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을 상기했을 때, 2018년에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이 준거집단 대비 향후 매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은 <표 V-16>, <표 V-17>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강건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2018년 가맹시점 터미변수가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016년 청년배당 정책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성남사랑상품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남시내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정책이 2018년에 정착이 된 것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2017년의 터미변수가 큰 효과가 없고, 그의 부호가 음(-)의 값을 갖게 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이 갖는 설득력이 약하다. 가맹시점이 서로 다를 때 해당 연도에 가맹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 자체가 이질적인 데에서 기인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있을 가능성, 아니면 2018년도에 영세사업자를 장려하는 다른 정책이 추가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V-15〉 향후 긍정적인 매출 예상과 가맹점 여부 및 정책 영향 의견과의 관계 - Probit(시군구 레벨 클러스터)

변수 설명		p1	p2	p3	p4	p5	p6
가맹점 더미변수		-0.203	-0.241	-0.266	-0.195	-0.217	-0.196
가맹점 더미변수 · 상품권 긍정평가 더미변수		1.300***	1.351***	1.375***	1.345***	1.366***	1.334***
업력	업력	-0.219***	-0.224***	-0.233***	-0.241***	-0.246***	-0.252***
	업력 제공항	0.018***	0.018***	0.018***	0.019***	0.019***	0.020***
업종 (base=택시, 산하기관 구내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의류, 신발 등)	-	3.409***	3.549***	3.470***	3.485***	3.515***
	소규모 식품점(곡물, 육류 등)	-	3.459***	3.653***	3.530***	3.576***	3.613***
	음식점	-	3.347***	3.454***	3.357***	3.357***	3.367***
	카페	-	4.013***	4.213***	4.108***	4.153***	4.180***
	학원	-	3.218***	3.238***	3.230***	3.168***	3.188***
	서비스업(미용실, 세탁소 등) 병원, 산후조리원 등	-	2.894***	3.078***	2.997***	3.029***	3.048***
사업장 면적 (base=15평 이하)	15~30평	-	-	0.341*	-	0.268	0.278
	30~45평	-	-	0.444	-	0.307	0.297
	45평 이상	-	-	0.293	-	0.067	0.07
임금근로자수	근로자	-	-	-	0.114**	0.094	0.093
사업장 소유 여부	임대	-	-	-	-	-	0.162
소재지 (base=중원구)	분당구	-	-	-	-	-	0.177
	수정구	-	-	-	-	-	0.214
상수항		-1.194***	-4.552***	-4.853***	-4.728***	-4.839***	-5.158***
표본 개수		812	812	812	812	812	812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6〉 향후 긍정적인 매출 예상과 가맹시점과의 관계 - Probit(시군구 레벨 클러스터), 비가맹점 포함, 업력 무관

변수 설명		p1	p2	p3	p4	p5	p6
가맹시점 (base=비가맹점)	2015년 이전	0.347	0.302	0.305	0.37	0.37	0.441
	2016년	0.143	0.121	0.104	0.17	0.154	0.179
	2017년	-0.483	-0.54	-0.606	-0.494	-0.563	-0.538
	2018년	0.368	0.368	0.348	0.418*	0.395*	0.405*
	2019년	0.425*	0.415*	0.419*	0.450**	0.451**	0.445**
업력	업력	-0.156**	-0.151**	-0.152**	-0.166**	-0.165**	-0.183***
	업력 제곱항	0.014**	0.013**	0.013**	0.014**	0.014**	0.015***
업종 (base=택시, 산하기관 구내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의류, 신발 등)	-	3.417***	3.923***	3.743***	3.840***	3.939***
	소규모 식품점(곡물, 육류 등)	-	3.572***	4.112***	3.896***	4.010***	4.108***
	음식점	-	3.348***	3.811***	3.618***	3.693***	3.764***
	카페	-	3.929***	4.488***	4.281***	4.407***	4.515***
	학원	-	3.325***	3.706***	3.585***	3.610***	3.680***
	서비스업(미용실, 세탁소 등)	-	2.911***	3.453***	3.260***	3.369***	3.441***
사업장 면적 (base=15평 이하)	병원, 산후조리원 등	-	3.843***	4.304***	4.165***	4.212***	4.263***
	15~30평	-	-	0.324**	-	0.254	0.274
	30~45평	-	-	0.373	-	0.226	0.224
임금근로자수	45평 이상	-	-	0.269	-	0.047	0.077
	근로자	-	-	-	0.112***	0.095*	0.091
사업장 소유 여부	임대	-	-	-	-	-	0.384
소재지 (base=중원구)	분당구	-	-	-	-	-	0.295
	수정구	-	-	-	-	-	0.308
상수항		-1.338***	-4.733***	-5.390***	-5.167***	-5.352***	-6.023***
표본 개수		812	812	812	812	812	812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7〉 향후 긍정적인 매출 예상과 가맹시점과의 관계 - Probit(시군구 레벨 클러스터), 2015년 이전 개소 사업장만

변수 설명		p1	p2	p3	p4	p5	p6
가맹시점 (base=비가맹점)	2015년 이전	0.519	0.423	0.422	0.502	0.5	0.569
	2016년	0.441	0.451*	0.440*	0.520*	0.506*	0.527**
	2017년	-0.16	-0.313	-0.348	-0.251	-0.284	-0.269
	2018년	0.530*	0.594**	0.591*	0.659**	0.645**	0.705**
	2019년	0.298	0.261	0.266	0.284	0.28	0.255
업력	업력	0.180	0.239*	0.232	0.224	0.219	0.192
	업력 제곱항	-0.011	-0.016	-0.016	-0.015	-0.015	-0.013
업종 (base=택시, 산하기관 구내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의류, 신발 등)	-	3.074***	3.107***	2.970***	3.018***	2.985***
	소규모 식품점(곡물, 육류 등)	-	3.654***	3.730***	3.550***	3.617***	3.593***
	음식점	-	3.109***	3.147***	2.942***	2.999***	2.939***
	카페	-	3.788***	3.903***	3.756***	3.843***	3.747***
	학원	-	3.162***	3.127***	2.932***	2.978***	2.932***
	서비스업(미용실, 세탁소 등)	-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사업장 면적 (base=15평 이하)	병원, 산후조리원 등	-	3.925***	3.971***	3.825***	3.872***	3.796***
	15~30평	-	-	0.177	-	0.086	0.091
	30~45평	-	-	0.179	-	-0.033	-0.026
임금근로자수	45평 이상	-	-	0.363	-	0.142	0.16
	근로자	-	-	-	0.133**	0.129**	0.111*
사업장 소유 여부	임대	-	-	-	-	-	0.226
소재지 (base=중원구)	분당구	-	-	-	-	-	0.338
	수정구	-	-	-	-	-	0.299
상수항		-2.431***	-5.736***	-5.848***	-5.753***	-5.819***	-6.176***
표본 개수		513	440	440	440	440	440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1.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 대상 현금지원의 증가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정책이 청년의 일자리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제Ⅱ장에서는 현재 청년 대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검토하여, 현금수당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파악된다.

제Ⅲ장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년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유독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청년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기존 문헌은 찾기 어려웠다.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를 한정짓기는 어렵다. 결국,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논의, 정책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Ⅳ장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취업상태 및 취업일저리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과 가정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만약 가구의 소득이 이러한 청년의 취업과 관련된 성과 변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현금지원이 잠재적으로 유동성 제약에 마주하는 혹은 구직비용이나 학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량분석 결과, 먼저, 가구의 소득이 청년들의 일자리 양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이 청년들이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를 취득할 확률을 높이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취업 자체를 하거나 정규직 일자리를 취득할 확률을 높이는 경우는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영향이 주로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들(고졸 혹은 전문대 진학자)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4년제 대학교육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졸 미만이나 전문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애초부터 취약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등학교 거주지와 4년제 대학의 소재지와 일치하는 경우에 오히려 가구소득이 청년의 일자리 성과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러한 결과는 적은 수의 관측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풍부한 관측치를 보유한 데이터로 추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사실에 가깝다면, 이를 해석할 때 다음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시기부터 대학 진학을 위하여 가족 전체 혹은 청년 본인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거주비용에 대한 부담이 무척 클 수 있고 위의 정량분석 결과를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반영할 것일 수 있다.

나아가, 4년제 졸업 청년들이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를 획득하는 데에는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 특히 모의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이 대부분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집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이 대졸자의 일자리 성과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하지만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대졸 청년들의 일자리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효력을 모두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 지원정책을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고, 지자

체의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후생의 증진 목적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지니기 때문이다.

지역의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청년들의 일자리 성과에는 미미한 효과를 미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V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용이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지역상품권의 활성화가 지역상품권 가맹 사업장의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청년배당 정책이 2016년도 도입이 되고, 이를 계기로 성남시의 청년사랑상품권 큰 규모로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청년배당 정책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는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지역상품권의 효과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V장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임의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분석하여, 성남사랑지역상품권의 매출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실질적인 매출이 아닌 향후 매출에 대한 예상이 회귀분석의 주요 성과변수라는 점에서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하여 향후 일년 간의 매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가 그러한 매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성남시의 상품권 정책이나 가맹점 수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부터 지역상품권 정책과 가맹 대상 업종의 매출 전망이 적지 않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역상품권으로 주어지는 청년 지원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대졸자 청년들의 경우 가구소득보다는 부모의 가정환경이 좋은 일자리 취득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금지원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성과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은 발생할 것인가? 성남시 청년배당 관련 사업장 설문조사 분석결과,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향후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노동투입량 증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즉, 매출 증대가 곧바로 노동투입량 증대에 이어지지 않은 만큼 매출 변동분에 대한 노동투입량의 탄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때 정의되는 '노동투입량'에는 사업주 자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확대되는 만큼 매출 변동분에 대한 '일자리' 변동의 탄력성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상품권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일자리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영세 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점을 고려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다수의 대졸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청년' 관점이 아니라 '사업체' 관점에서도 현재의 '취약 사업체 중심의 지역상품권' 적용 방침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상품권을 이용한 청년정책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나름 긍정적일 수 있다. 청년지원 수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 청년들 및 영세 사업장은 공동체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흥의 경우, 시흥화폐 '시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과 단위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경험을 겪은 바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청년이 일자리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원 규모와 상관없이 청년지원 정책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간에 청년 대상 관점에서는 적잖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가 노동수요 차원의 문제일 경우, 이러한 지원 정책이 단기적 정책에 국한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과 이러한 단기적 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취득할 때 경제적 여건보다 부모의 교육수준 등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정부가 물질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실업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을 내포한다.

단,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임금 정규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2. 정책적 시사점

### 가. 경제적 성과 관련: 이전지출 형태의 지원 vs 양질의 고용서비스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가 청년들의 교육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경우에 나타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청년들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과의 연관성에 주목해볼 때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교육수준에 가구소득의 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청년들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의 정보가 상호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교육수준만이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구소득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가구소득이 아닌 부모의 교육수준이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비금전적인 요인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추측컨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가 학업이나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에게 스스로 맡겨 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

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 이전지출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필요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고용서비스나 취업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청년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태적, 동태적 경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고용 및 취업서비스가 부모의 교육수준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효과적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고용 및 취업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접근성 개선, 청년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대상을 중심으로 관련 재정지원의 확대 등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단,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취업 여부나 임금수준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한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에는 없지만, 청년들의 구직활동 등 복리후생을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효과분석이 조사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정책수혜 여부를 직접 평가하지 못한 만큼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다수의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할 때, 지역상품권으로 제공되는 청년 대상 현금지원의 확대로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해당 정책의 효과를 아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나. 지역상품권과 결합한 청년지원의 사업체 효과

앞서 특정 지자체 사례에 국한하여 본원 자체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맹점의 경우 비가맹점에 비하여 향후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초통계량이나 회귀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지원 정책의 확대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상품권 가맹점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매출에 대한 가맹점의 기대가 비가맹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것에 비해, 향후 노동사용량에 대한 기대수준은 가맹점과 비가맹점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지역상품권 대상의 사업체가 영세사업체인 만큼, 청년지원 정책을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내 고용규모를 확대하는 효과까지 낳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특히, 가맹점에서의 고용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영세사업체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수요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성과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다.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청년 대상 현금지원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을 때,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제안 중에서 지역상품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연구자가 지역상품권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한 내용에 일부 기반하고 있다.

##### 1) 지방정부의 역할

- (증거기반 정책 추구)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료를 통하여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만족도만을 가지고 현금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고용서비스 및 멘토링 서비스에의 재정투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제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실질적인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 등에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현금지원에 소요되는 재정

의 일부를 취약한 청년들 대상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재정 효율화를 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상품권 운영방식의 투명화) 지역상품권으로 복지정책을 운영하는 유형은 지류, 모바일, 카드형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때 카드형으로 지급하는 경우, 민간 카드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지역 내 영세사업체를 지원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 카드형으로 금액이 제공되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류나 모바일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보통 지자체가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확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가맹사업체를 꾸준히 관리하는데 일정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와 달리 인쇄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현재 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0원의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휴대폰 보급률이 크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류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역상품권의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지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준의 할인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개인이 해당 할인율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주일 혹은 한달 구매량의 한도를 정하거나 구매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할인된 지역상품권의 유통으로 특정 사업체만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지역상품권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 지역상품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영세 사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특정 사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업종에 종사하는 임의의 사업체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지역상품권으로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만, 어떠한 사업체에서 해당 지역상품권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재량적인 소비결정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당 분야의 진입퇴출이 자유로워 그 결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2) 중앙정부의 역할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혜 관련 통합정보망 구축) 중앙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수당 및 다른 청년정책의 수혜정보를 적어도 수혜자들과 실무담당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복 여부를 승인하거나 허용하기 앞서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 (지방정부의 현금지원에 대한 자체점검 가이드라인 논의)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으로 현금성 청년정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성공적인 지자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중복수혜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이전지출과 지자체의 현금지원이 중복수혜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 이슈는 지방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사실 매우 첨예한 이슈일 수 있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만약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면 지자체의 현금지원 정책의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가 높은 경우에 국한하여 일부 지자체에만 청년 대상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외된 지역의 청년들에 대하여 정부가 과연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의 기준과 조건 마련) 지자체의 경우 소득수준 상관 없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복지정책의 부적효과(stigma effect)를 없앤다는 점과, 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효과가 사실상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계층에도 이전지출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계점 역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청년 대상 현금지원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재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같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앞서 언급한 항목과도 연관을 지어볼 때), 청년 현금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지자체의 청년들에게 가능한 한 중앙정부의 서비스가 간접적으로라도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지역상품권 관련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류보다 모바일 상품권이 유통비용이 적고, 접근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만약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상품권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단,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플랫폼 개발비용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폐공사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가맹사업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역시 중앙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당 시스템을 지자체에 무료 배포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

## 참고문헌

---

- 강남훈,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5.
- \_\_\_\_\_,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pp. 11~26.
- 강신욱·노대명·여유진·이현주·정은희·정해식·최현수·최준영, 「복지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맞춤형 복지정책 발전방향 연구: 4차 산업혁명 대비 복지전략」,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경기도,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보도자료, 2019. 3. 27.
- 경상북도, 「2019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공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19-107호, 2019. 4. 1.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대책-학교,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중심으로」, 2005. 1.
- \_\_\_\_\_,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제7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 확정안) 2006. 6. 13.
- \_\_\_\_\_, 「20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15. 12.
- \_\_\_\_\_,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18. 12.
-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 2017. 3. 22.
- \_\_\_\_\_, 「청년 일자리 대책」, 보도자료, 2018. 3. 15.
- \_\_\_\_\_,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17. 12.
- 기획재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보도자료, 2018. 3. 15.
- 김문길·김미곤·김태완·최민정·이세미,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 청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김안나·홍현우,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49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8, pp. 93~124.
- 김영재·정상완, 「한국 역대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비교 연구」, 『취업진로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취업진로학회, 2013, pp. 1~20.
- 대전광역시, 「2019년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429호, 2019. 3. 15.
- Mascherini, Massimiliano, 「유럽 청년보장: 유럽 청년정책의 새로운 기본틀」,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6, pp. 5~26.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750호, 2019. 3. 13.
- 서울특별시,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 (1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774호, 2019. 3. 15a.
- \_\_\_\_\_, 「2019 서울시 청년수당 FAQ」, 2019. 3. 15b.
- 성남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모바일 또는 성남사랑카드로 지급」, 보도자료, 2019. 4. 9.
- 심창학, 「청년실업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대응 양식: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은 존재 하는가?」, 『유럽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유럽학회, 2017, pp. 221~251.
- 오선정, 「EU 청년보장제도의 효과」, 『국제노동브리프』, 2018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8, pp. 49~57.
- 오재호·천영석, 「청년지원, 해답인가 문제인가?」, 『이슈&진단』, 제249호, 경기연구원, 2016. 9. 29.
- 유경준·강창희·최바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경제학연구』, 제64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16, pp. 73~106.
- 이병희·김혜원·길현종·김종진, 「청년구직촉진수당 개편방향 연구」, 고용노동부, 2018.
- 이승렬·김세움·김진영·성재민·오선정·홍민기,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7.

- 이승윤·이정아·백승호,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제52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pp. 365~405.
- 이철인, 「청년고용촉진장려금 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9권 제4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16, pp. 1~31.
- 인천광역시, 「인천시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01호, 2019. 5. 8.
- 전라남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487호, 2019. 5. 3.
- 전주용·전재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노동경제논집』, 제40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17, pp. 99~132.
- 채창균·최영섭·오호영·정재호,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 한요섭,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KDI, 2017.
- Ahn, T., “Assessing the effects of reemployment bonuses on job search: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65, 2018, pp. 82~100.
- Angrist, Joshua David and Jörn-Steffen Pischke,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Betcherman, G., Godfrey, M., Puerto, S., Rother, and F., Stavreska A., “A Review of Interventions to Support Young Workers: Findings of the Youth Employment Inventory,”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0715, The World Bank, 2007.
- Caliendo M. and Schmidl R., “Youth unemployment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Europe,” *IZA Journal of Labor Policy*, 2016, 5 (1), pp. 1~30.

- Cameron, A. C. and Miller, D. L., "A practitioner's guide to cluster-robust infer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50(2), 2015, pp. 317~372.
- Cameron, A. C. and Trivedi, P. K., *Micro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Carcillo, S., Fernández, R., Königs, S., and Minea, A.,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4, OECD Publishing, Paris, 2015.
- Escudero, V. and Mourelo, E. L., "The European Youth Guarantee: A systematic review of its implementation across countries,"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1, ILO, Geneva, 2017.
- European Commission, "First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France,"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2016.
- \_\_\_\_\_,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 France,"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2018.
- Hämäläinen, K., Hämäläinen U., and Tuomala J., "The labour market impacts of a youth guarantee: lessons for Europe?," VATT Working Papers 60, Government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Helsinki, 2014.
- Kyyrä, T., Parrotta P., and Rosholm M., "The effect of receiving supplementary UI benefits on unemployment duration," *Labour Economics*, 21, 2013, pp. 122~133.
- Lombardi, S. Skans, O. N., and Vikström J., "Targeted wage subsidies and firm performance," *Labour Economics*, 53, 2018, pp. 33~45.
- McLeod, K., Dixon, S. and Crichton S., "Evaluation of the Impact of the Youth Service: Youth Payment and Young Parent Payment," New Zealand Treasury Working Paper 16/07, New Zealand Treasury, Wellington, 2016.
- Maibom, J., Rosholm, M., and Svarer M., "Can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 Combat Youth Unemployment?,” Discussion Paper No. 7912, IZA, Bonn, 2014.
- OECD, Jobs for Youth: Korea, OECD Publishing, Paris, 2007.
- \_\_\_\_\_,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2016.
- \_\_\_\_\_, Evidence-based Policy Making for Youth Well-being: A Toolkit, OECD Development Policy Tools, OECD Publishing, Paris, 2017a.
- \_\_\_\_\_, Youth Aspirations and the Reality of Jobs in Developing Countries: Mind the Gap, Development Centre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2017b.
- \_\_\_\_\_, Youth Stocktaking Report, OECD Publishing, Paris, 2018.
- OECD and ILO, “Promoting better labour market outcomes for youth,” Report on youth employment and apprenticeships prepared for the G20 Labour and Employment Ministerial Meeting, Melbourne, Australia, 10-11 September 2014.
- Quintini G. and Martin S., “Same Same but Different: School-to-work Transitions in Emerging and Advanced Econom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4, OECD Publishing, Paris, 2014.
- Sjögren, A. and Vikström, J., “How long and how much? Learning about the design of wage subsidies from policy changes and discontinuities,” *Labour Economics*, 34, 2015, pp. 127~137.
- La Spina, A. and Barbetti, D., “The European Youth Guarantee: Evaluation and Analysis,” LUISS, 2014.

### 〈웹 사이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부예산안」, [likms.assembly.go.kr/bill/main.do](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 일자: 2019. 9. 30.

성남시 홈페이지, [www.seongnam.go.kr](http://www.seongnam.go.kr), 검색일자: 2019. 10. 23.

성남시 조례 제2955호, <https://www.seongnam.go.kr/synap/skin/doc.html?fn=20151218093907320.hwp&rs=/synap/result/bbs/30009>, 검색일자: 2019. 10. 23.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검색일자: 2019. 9. 30.

청년창업사관학교, [https://start.kosmes.or.kr/yh\\_ysi020\\_001.do](https://start.kosmes.or.kr/yh_ysi020_001.do), 검색일자: 2019. 6. 1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시스템, 「청년패널조사(1~11차)」, <https://survey.keis.or.kr>, 검색일자: 2019. 9. 30.

## 부 록

### 1. 기존 문헌조사

〈부표 1〉 청년 관련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정리

연번	분류	제목	저자	출판연도	출판기관	분석국가	사용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1	OECD	Jobs for Youth-KOREA	OECD (한창훈)	2007	OECD	한국	1990년대 후반 이후 악화된 한국 청년고용의 원인분석과 정책권고 제시	1990년대 후반 이후 청년실업 원인) ①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로 노동수요-공급 불일치 증가 ② 고용형태별 보호수준의 격차는 노동시장의 질을 악화시키고 청년의 정규직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③ 구직 중 비고용 청년에 대한 지원 부족 〈정책권고〉 -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 학생 대상 직업안내 서비스 제공 - 고용보호 입법의 포괄적 개혁추구 - NEET 청년 대상 정책 우선순위 강화 -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청년구직자의 수요 부합 노력 지속	

〈부표 1〉의 계속

연번	분류	제목	저자	출판 연도	출판 기관	분석 국가	사용 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2	OECD	Promoting better labour market outcomes for youth (2014년 9월에 개최된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고자료(Background Paper))	OECD and ILO	2014	OECD, ILO	G20		청년 노동시장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년 실업 및 불완전고용 추세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정책과 기술 습득 및 양질의 일자리 진업을 위한 장벽 제거 등 장기 정책을 추진할 필요</li> <li>② 양질의 견습제도 및 인턴십제도는 청년들의 교육-노동 연계 강화 역할</li> <li>③ G20 간 최근 청년고용 정책의 성공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여 자국 정책에 활용</li> </ul>
3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ch.1)	OECD	2016	OECD	OECD 회원국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회원국 정책 검토 - 3절: 청년 대상 소득 지원 정책*을 다룸 * 실업급여, 가족수당,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장애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년 대상 소득지원 정책은 비청년에 비해 낮은 효과</li> <li>② 분석방법: 청년(16~29세)과 비청년(30~64세)으로 나누어 소득지원을 받기 전 대비 빈곤층 탈피 비율 분석</li> </ul>
4	OECD	Evidence-based Policy Making for Youth Well-being: A Toolkit (Part II, ch.6)	OECD	2017	OECD	-		Part II의 Ch.6에서는 청년 대상 정책의 효과 측정 방법을 소개	청년 대상 정책효과 측정방법 정리

〈부표 1〉의 계속

연번	분류	제목	저자	출판연도	출판기관	분석국가	사용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5	OECD	Youth Aspirations and the Reality of Jobs in Developing Countries	OECD	2017	OECD	ILO의 학교-직장 전환 조사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 조사,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실제 일자리 간의 격차</li> <li>- 사회·경제·정치적 측면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의 본질과 결정 요인을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개도국 청년 대상 취업 선호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청년들의 희망 직업과 실제 일자리 사이에 큰 격차</li> <li>② 상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양면전략(two-pronged strategy) 활용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 청년들의 비현실적인 기대 축소</li> <li>→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조건을 고려하여 일자리 질 향상</li> </ul> </li> </ul>
6	OECD	Youth Stocktaking Report	OECD	2018	OECD	OECD 회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회원국의 청년 문제 접근법 소개</li> <li>-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등 포함</li> </ul>	청년정책의 실행 및 조정 강화, 청년의 의회, 정부, 공공행정 대표성 보장 등
7	OECD	Same Same but Different: School-to-work Transitions in Emerging and Advanced Economies	Glenda Quintini, Sébastien Martin	2014	OECD	16개국 (선진국 및 개도국 각 8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과 개도국의 청년 노동시장 문제점 검토</li> <li>- 문제 해결 위한 정책의 차이점과 유사점 논의</li> </ul>	<p>학교-노동시장 전환관점 검토 결과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 선진국은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업 유지에 초점, 개도국은 일찍 학업을 마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경향</li> <li>② (노동시장) 선진국은 청년들에게 실업급여 자격을 부여, 개도국은 실업급여 제도가 없거나 실업기간 동안 지원 제한</li> </ul>

〈부표 1〉의 계속

연도	분류	제목	저자	출판 연도	출판 기관	분석 국가	사용 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8	OECD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Stéphane Carcillo et al.	2015	OECD	OECD 회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기 이후 청년 NEET의 상황 검토</li> <li>- 청년 소득지원 정책 내용과 효과를 제시</li> <li>* 실업급여, 가족수당, 주거급여, 공공부조</li> </ul>	특별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은 고용에 취약한 청년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음
9	연구 보고서	First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 France	European Commission	2016	European Commission	프랑스		프랑스 청년고용정책 평가 (중앙정부 사업에 한함)	<p>프랑스 청년 고용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 NEET의 29%(30만명 중 8만 7천명)에게 교육, 훈련,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말까지 목표의 두 배 이상 달성(참여자 탈퇴의 52%가 고용, 훈련, 교육으로 인한 탈퇴)</li> </ul>
10	연구 보고서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 – France	European Commission	2018	European Commission	프랑스	중앙 및 지방정부 수준 데이터	프랑스 청년보장 (Youth Guarantee) 제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청년보장제도 참여 후 4개월 이내에 고용제안을 받은 비율은 26.3%</li> <li>- 2016년 평균적으로, 청년보장제도 참여자의 77.8%가 고용제안을 4개월 이상 기다렸으며, 31.4%는 1년 이상 기다림</li> </ul>
11	연구 보고서	The European Youth Guarantee: Evaluation and Analysis	Antonio La Spina and Davide Barbetti	2014	LUISS	이탈리아		EU 청년보장제도 소개 및 이탈리아의 청년보장제도 평가(중앙 및 지방)	이탈리아 청년보장제도는 수요와 기능 간 비효율을 보여왔으며, 동 제도는 자원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부표 1〉의 계속

연번	분류	제목	저자	출판 연도	출판 기관	분석 국가	사용 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12	연구 보고서	The European Youth Guarantee: A systematic review of its implementation across countries	Verónica Escudero and Elva López Mourelo	2017	ILO	EU 회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보장제도 성공의 핵심요소 파악을 위해, 동 제도의 기존 평가 및 과거 청년보장제도 시행의 효과성 분석</li> <li>- EU 회원국 실행계획 내 핵심 성공요소 포함 여부 목표 충족 여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EU 회원국에서 조기 개입 및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 목표 달성 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li> <li>- 회원국의 청년보장제도 초기지출이 종종 계획한 지출을 초과하는 경향 존재, 많은 경우에는 자원배분이 권장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였음</li> </ul>
13	연구 보고서	복지육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맞춤형 복지정책 발전방향 연구(제4장)	강신욱 외	2017	복지부	한국		<p>제4장: 청년(구직) 수당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 시행방안, 대상자 및 예산추계, 기대효과, 고려사항 등 제시</p>	<p>(제4장) 청년(구직)수당 관련: 3가지 대안* 별 대상자 및 소요예산을 추계</p> <p>* 5분위 이하의 미취업자에게 월 25만원씩 지급/7분위 이하 미취업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중위소득의 60% 이하에게 월 15만원씩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방안별 빈곤율과 빈곤격차 비율 감소효과를 추정한 결과 청년수당 대안 별 빈곤해소 효과는 빈곤율 및 소득격차 비율 모두 현행보다 감소할 전망</li> </ul>
14	연구 보고서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	김문길 외	2015	청년위원회	한국		<p>청년의 빈곤 및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정책제언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근로빈곤층 지원) EITC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검토, 비정규직 처우 개선</li> <li>- (미래 근로빈곤층 지원) 청년빈곤층 취업역량 강화, 취업연계 서비스 강화, 사회적 자본, 문화자본 확충</li> <li>- (장기적·포괄적 관점의 접근) 정부의 취약계층 직접고용, 청년종합실태조사 실시</li> </ul>

〈부표 1〉의 계속

연도	분류	제목	저자	출판 연도	출판 기관	분석 국가	사용 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15	연구 보고서	유럽 청년보장: 유럽 청년정책의 새로운 기본틀	Massi -milano Mascherini	2016	노동연	EU 회원국		유럽 내 청년고용 현황을 제시하고 2013년 이후로 ‘청년보장’ 프로그램의 시행 진척상황 논의	유럽 청년보장제도 및 우수사례 소개, 노동시장 주체-교육기관-노사 간 효율적 파트너십 구축문제, 청년보장제도 이행을 위한 자원조달 문제,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의 흡수능력 등 유럽 청년보장제도 이행 첫 1년 동안 발생한 장애요인 검토
16	연구 보고서	EU 청년보장제도의 효과	오선정	2018	노동연	EU 회원국		EU 청년보장제도가 유럽의 청년실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청년보장제도가 청년 실업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명확</li> <li>- EU 청년 실업률은 GDP 변화를 바탕으로 예측된 청년 실업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li> <li>- EU 회원국의 성인 실업률(25세 이상)과 청년 실업률(24세 이하)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청년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에도 청년 실업률과 성인 실업률의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음</li> </ul>
17	연구 보고서	청년지원, 해답인가 문제인가?	오재호 외	2016	경기연구원	한국		현행 청년고용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 추진방향 모색	청년 고용 지원정책은 청년의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청년의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적응, 역량 강화 등 지원 필요
18	연구 보고서	청년구직촉진수당 개편방향 연구	이병희 외	2018	고용부	한국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개편방안 모색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타 취업지원 정책과의 관계 설정 등 분석검토

〈부표 1〉의 계속

연번	분류	제목	저자	출판연도	출판기관	분석국가	사용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19	연구 보고서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제8장)	이승렬 외	2017	노동연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와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li> <li>- 제8장: 청년수당과 청년배당</li> </ul>	제8장: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서울시)과 청년배당(성남시)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 검토한 후, 두 사업을 옹호하는 주장과 비판하는 주장을 검토
20	연구 보고서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채창균 외	2017	직능원	EU 회원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청년보장제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청년보장제도 운영의 시사점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지원 대상: ① 취업준비 저소득 가구 출신 청년 ② 고졸 니트, ③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준비를 포기하려는 취업준비생, ④ 기혼여성</li> <li>- 정책전달: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의 틀을 보완, 발전시켜 추진</li> <li>- 소득지원: ① 취업준비 저소득 가구 청년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자산기준을 통과할 경우 지원, ② 나머지 세 그룹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의 자산조사를 통하여 지원</li> </ul>
21	국내 논문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강남훈	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한국 (성남시)	성남시 자체 설문조사 (2016년 4월 20~22일 기간)	청년배당 관련 논쟁을 정리하고, 2016년 청년배당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시	<p>〈설문조사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 상태별, 소득수준별 모두 찬성비율 95% 이상</li> <li>- 소득원천의 부모 의존 여부와 상관없이 찬성 95% 이상</li> <li>- 소득수준별로 지출 항목 비중에 차이</li> <li>- 거주지별로는 소득을 통제하고 난 뒤에도 찬성률에 의미 있는 차이 존재</li> </ul>

〈부표 1〉의 계속

연도	분류	제목	저자	출판 연도	출판 기관	분석 국가	사용 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22	국내 논문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김이나 · 홍현우	2018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한국	2012~2016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 증가 추세</li> <li>-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중사상 지위, 대졸 등에 따라 상이, 소득보장 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 효과는 미미</li> <li>-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 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li> </ul>
23	국내 논문	청년실업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대응 양식	심창학	2017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프랑스		프랑스 청년고용정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타깃 측면에서 일부 정책은 청년고용정책에 미부합</li> <li>- 청년집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하위집단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 및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과 초래</li> <li>- 프랑스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기간제 등 취약한 성격을 보임</li> </ul>
24	국내 논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유경준 외	2016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한국	고용보험 DB, 국민연금 DB 행정자료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성과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 그리고 고용규모의 관점에서 평가	두루누리 시범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4%,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약 3.1% 증가시킴. 그러나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두루누리 본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약 2.68%,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약 2.04% 유의하게 증가. 본사업 또한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부표 1〉의 계속

연번	분류	제목	저자	출판연도	출판기관	분석국가	사용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25	국내 논문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이승윤 외	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한국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청년층의 적정기본소득 산정 및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세 가지 정책대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현재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li> <li>- 본격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대안* 제시</li> <li>* 청년최저임금의 생활 임금화, 청년 임금보조수당, 청년 기본소득</li> </ul>
26	국내 논문	청년고용촉진장려금 효과 분석	이철인	2016	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한국	고용보험 DB	2004년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기간 약 18일 단축, 임금수준 약 3% 향상</li> <li>-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향하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또한 표본기간 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 지지</li> </ul>
27	국내 논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전주용 · 전재식	2017	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한국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일모아-고용보험DB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 잠재력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 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 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li> </ul>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 청년 관련 최근의 해외문헌 정리

연번	분류	제목	저자	출판연도	출판기관	분석국가	사용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1	해외 학술 저널	How long and how much? Learning about the design of wage subsidies from policy changes and discontinuities	Anna Sjögren and Johan Vikström	2015	Labour Economics	스웨덴	Swedish public employment service (PES) 데이터	임금 보조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보조금은 장기 실업 감소에 효과</li> <li>- 보조금 지급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 수록 효과도 증가</li> <li>- 보조금 만료 후 고용은 감소하나, 보조금을 받는 고용을 찾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율은 보조금 만료 후에도 높게 나타남</li> </ul>
2	연구 보고서	A Review of Interventions to Support Young Workers: Findings of the Youth Employment Inventory	Gordon Betcherman et al.	2007	The World Bank	전 세계 84개국의 청년고용 프로그램 분석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증거기반 정책수립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일반적인 청년고용 정책은 기술 훈련이며, 저소득 또는 저소득 가구 청년 대상 프로그램도 전체 51%</li> <li>- 청년고용 정책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유리한 경향</li> <li>- 청년고용 정책은 효과는 크지 않지만 노동 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국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미미</li> </ul>
3	해외 학술 저널	Can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Combat Youth Unemployment?	Jonas Maibom et al.	2014	IZA	덴마크	National Labor Market Authority 통합자료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추진한 ALMP의 효과성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청년고용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 강화는 고용증가효과 부재</li> <li>- ALMP 강화는 질병수당(sickness benefit)으로의 전환을 증가</li> </ul>
4	해외 학술 저널	The labour market impacts of a youth guarantee: lessons for Europe?	Kari Härmäläinen et al.	2014	VATT	핀란드	공공데이터	2005년 핀란드에 도입된 청년보장(Youth guarantee) 프로그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23~24세 실업에 대해 미미한 영향.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고용을 다소 증가시킴</li> <li>-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 실업자에게 긍정적 효과 존재</li> </ul>

〈부표 2〉의 계속

연번	분류	제목	저자	출판연도	출판기관	분석국가	사용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5	해외 학술 저널	Evaluation of the Impact of the Youth Service: Youth Payment and Young Parent Payment	Keith McLeod et al.	2016	NZ Treasury	뉴질랜드	Integrated Data Infrastructure (IDI)	독립 청년 급여 (Youth Payment; YP) 및 청년부모 급여(Young Parent Payment; YPP)의 효과성 평가	프로그램 참여는 단계에 후속 급여 수급률을 증가시켰으나 중기(24~30개월)에는(특히 YPP 수급자) 급여수급에서 탈퇴하여 근로상태로 이동하는 데 기여
6	해외 학술 저널	Youth unemployment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Europe	Marco Caliendo and Ricarda Schmidl	2016	IZA	서베이 논문		유럽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ALMP 연구 논문 종합·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 효과가 혼재, 구직지원 효과는 대다수 긍정적, 훈련 및 임금보조금에 대한 효과는 혼재, 공공근로 프로그램의 효과는 명백히 부정적</li> <li>- 추가 교육 참여, 고용의 질에 대한 ALMP 영향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연구 필요</li> </ul>
7	해외 학술 저널	Targeted wage subsidies and firm performance	Stefano Lombardi et al.	2018	Labour Economics	스웨덴	스웨덴공공데이터	임금 보조금이 구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을 통한 고용효과 존재</li> <li>- 보조금 승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개인을 제거한 개혁 이후 2007년부터의 패턴은 불분명</li> <li>→ 사회복지사를 통한 사전심사 허용 시, 고용보조금은 구인기업의 고용 증가 기여 가능성</li> </ul>

〈부표 2〉의 계속

연도	분류	제목	저자	출판연도	출판기관	분석국가	사용데이터	주요 연구주제	주요 결과
8	해외 학술 저널	Assessing the effects of reemployment bonuses on job search: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Taehyun Ahn	2018	Journal of Public Economics	한국	고용보험DB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재취업수당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0.16~0.42개월(0.68~1.82주) 단축]</li> <li>- 고용 안전성은 조기재취업수당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음</li> <li>- 실업급여 수급자의 행태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 및 실업급여 감소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출 증가를 충분히 상쇄</li> </ul>
9	해외 학술 저널	The effect of receiving supplementary UI benefits on unemployment duration	Tomi Kyrrä et al.	2013	Labour Economics	덴마크	공공데이터	파트타임 근로와 파트타임 실업에 대한 보충급여 수급의 결과를 연구	기대 실업기간에 대한 순효과는 일부 긍정적 결과를 보인 그룹(예: 기혼여성)을 제외하고 부정적(예: 청년 근로자)으로 나타남

자료: 저자 작성

## 2.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sup>37)</sup>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제4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소년중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배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배당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①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2조제1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의 대상 중에서 해당년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청년배당은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7) 성남시 조례 제2955호, <https://www.seongnam.go.kr/synap/skin/doc.html?fn=20151218093907320.hwp&rs=/synap/result/bbs/30009/>(검색일자: 2019. 10. 23).

② 제1항의 지급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로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배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청년배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급결정·지급)**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청년배당은 매분기의 시작 월 20일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 청년 일자리 재정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

김문정 · 이수형

청년 대상의 현금지원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상품권의 형태로 청년 대상 현금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후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금지원 정책이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가구소득과 청년들의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현금지원 수혜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습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무조건부 현금지원이 청년의 성과관계에 대한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함이다. 분석결과, 가구소득은 청년들의 취업 여부, 임금수준, 건강상태, 스트레스 수준 등에 강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단, 부모의 교육수준은 이러한 성과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자체 상품권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가 이질적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향후 매출에 대한 예상은 비가맹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그 정도가 청년대환 현금지원이 확대되어 상품권 사용이 활발해진 시점에 특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책함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현 결과로 조심스럽게 정책함의를 제시하자면, 현금지원만으로는 상기 언급한 청년의 성과변수에 괄목할 만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수준을 대신할 만한 양질의 멘토링 서비스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청년들에게 제공된 재정지원이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앙정부는 동일한 재정 지원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대상 현금지원 정책 자체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대상자나 정책조건을 명료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to Youth in South Korea

---

Moon Jung Kim and Soohyung Lee

Cash transfers programs for youth become prevalent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aim to support both their youth and their vulnerable firms and self-employers by issuing the cash transfers for youth in local gift cards. This paper undergoes preliminary research to understand if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are able to achieve these goals. First, we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the youth performance. In the absence of direct data telling who has been given cash transfers from governments, we utilize the variable 'household income level' to understand a possible channel by which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influence on youth performances. The reduced-form analyses illustrate that the household income levels does not turn out to be a critical factor determining youth employment probability, wage rates and earnings, health status, and stress levels. Instead, parental education levels turn out to play greater roles in those performances. Secondly, we investigate whether local gift card affiliates differ from non-affiliates in their expectation toward future revenues. The analysis from our survey data demonstrates that local gift card affiliates have higher levels of future

revenues than non-affiliates, and the gap between the two groups turn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such gap is in particular higher for those firms or self-employers which joined the affiliation in the year when local card certificates became popular as a result of youth cash transfers programs. More rigorous quantitative analyses would be in need to produce more reliable policy suggestions. Tentatively, it seems that high quality mentor services for youth that could replace the input of parents with higher education as well as cash transfers programs. Also,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is unable to adopt youth cash transfers in terms of local gift certificates as local governments, conditional cash transfers for youth may be more necessary than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for youth.

## ■ 저자약력

### 김문정

고려대학교 영문학,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수형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미국 Stanford University 경제학 석·박사  
현, 서강대학교 부교수

### 자료 수집 및 정리

임현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 19-09

## 청년 일자리 재정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

발행	행	2019년 12월 31일
저자	자	김문정·이수형
발행인	인	김유찬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7,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일지사
I S B N		978-89-8191-319-9

---